

현안분석2006-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
Balance of Power의 개념사**

강 동 국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 : Balance of
Power의 개념사**

**Separ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The Concept of Balance of Power in Modern
North East Asia—**

**연구자 : 강동국(姜東局, 나고야대학)
Kang, Dong-Kook**

2006. 9.

국문초록

세력균형은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 □□만국공법□□을 통하여 국제정치학의 근본원리가 아닌 국제법의 원리로 소개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 권력을 통한 안정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력균형의 공간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일전쟁 이전에 조선과 중국에서 지식인과 외교가를 중심으로 □□만국공법□□의 국제법적 세력균형 이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지만 결국 문명의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서양근대를 문명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메이지 일본에서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국제정치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나타남에 따라 □□만국공법□□ 이후 지속되던 인식의 문제가 극복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된 일본은 곧 세력균형을 안정의 원리가 아닌 제국주의 침략의 원리로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세력균형에 대한 새로운 오해의 계기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력균형은 한반도와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팽창의 논리로서 배척당하고, 일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기능주의적 국제정치학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국제정치학의 원리로서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시작되기까지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이 등장하여 국제법학과 명확한 분립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립의 역사는 일천하며 따라서 전 세계적인 조류인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융합을 동아시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사가 남긴 유산을 고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 키워드 : 세력균형, 만국공법, 국제법, 국제정치, 권력, 도덕, 제국주의

Abstract

Balance of power,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was introduced to North East Asia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a Chinese translation of the book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n 1864. As a result, people of North East Asia were not able to understand that balance of power is a principle of stability through power and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independent one, ruled not by morality but by power. Even before the Sino-Japanese war, efforts to reexamine the meaning of balance of power appeared among intellectuals and diplomats of China and Korea. Those efforts, however, failed,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civilization as an epistemic background. This misunderstanding was solved in Japan soon after Sino-Japanese war, and this meant that the problem of perception from the translation of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finally ended. However, as the Japanese government soon began to use balance of power in their discourse as logic of justification for her imperialistic invasion, there appeared new cause of misunderstanding balance of power as a principle of instability. After World War One, balance of power was rejected in China and Korea as propaganda of Imperialism. And criticism existed even in Japan, that it was an old fashioned principle. Thus, balance of power was exclud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international politics as a discipline. After all, before the Cold War, independence of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had never appeared in North East Asia. This fact shows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of North East Asia has a background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world.

※ Keyword :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law, power, morality, imperialism

목 차

국문 초록

Abstract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문제의 설정	9
제 2 절 연구현황	11
제 3 절 개념 규정: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	13
제 2 장 □□만국공법(萬國公法)□□과 ‘균세(均勢)’	7..... 1
제 1 절 들어가며	17
제 2 절 □□만국공법□□에서의 ‘균세’의 위치	7..... 1
제 3 절 □□만국공법□□의 ‘균세’의 전파와 이해	7..... 2
제 4 절 나오며	38
제 3 장 국제법학(國際法學) · 국제정치(國際政治)와 ‘균세’	41
제 1 절 들어가며	41
제 2 절 국제법학의 등장과 ‘균세’의 위상 변화	41
제 3 절 □□만국공법□□의 ‘균세’와 국제정치의 ‘균세’ 비교	4..... 5

제 4 절 국제정치의 ‘균세’의 전파와 그 결과: 국제법학과 국제정치의 분화	57
제 5 절 나오며	62
제 4 장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의 등장과 ‘세력균형(勢力均衡)’	65
제 1 절 들어가며	65
제 2 절 국제정치학과 세력균형 1: 반(反)세력 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	65
제 3 절 국제정치학과 세력균형 2: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	79
제 4 절 나오며	83
제 5 장 결 론	85
참 고 문 헌	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설정

국민국가(nation state)를 유일한 단위로 하는 소위 근대국제질서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윤리도덕의 영역과 권력정치의 영역은 분화되었다.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은 두 영역의 분립 위에서 각자의 독자성을 확보해 왔다.¹⁾ 하지만 냉전의 붕괴 이후 근대국제질서는 심대한 변용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 변용으로 인해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적 범위의 한계를 경계로 하던 국내(정치·관계)와 국제(정치·관계)의 구별은 점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그 결과 경계로서의 국경의 역할도 저하되어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anarchy)로 이해되었던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윤리규범의 중요성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영역적 분립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국제법학계에서는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관계 그리고 국제법학에 있어서 국제정치가 가지는 의의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법학이 실무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적인 법 해석에 자신의 임무를 한정시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정치학계에 있어서도 오직 권력만을 유의미한 변수로 상정하는 편향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제법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점차

1) 본고에서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은 국가들 사이의 정치영역을 다루는 학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 이외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세계(global)차원의 논의와 정치 이외에 경제, 문화 등의 영역을 상정하는 관계(relations)의 논의 보다 극히 한정된 분야만을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본 논의가 다루는 시대의 객관적인 정세와 당시의 행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국제와 정치가 세계와 관계 속에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두 학문분야의 변화로 인하여 구미학계에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정치’가 현실감을 띤 연구주제로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²⁾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구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긴급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에는 탈냉전 이후의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상이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질서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변동의 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의 변동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영역을 다루는 학문분야인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긴밀한 공동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이 공동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두 학문분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에서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존재하여 왔고, 그 결과 현재 어떠한 관련을 맺고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불가결하다. 본고는 소위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 이후 냉전 초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국제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이 어떠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성되고 발전되어 결국은 분리되었던가를 탐구하는 작업을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연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거대한 연구주제를 규명에 있어서 본고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개념에 주목하려 한다.³⁾ 세력균형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정치

2) 미국의 국제법학계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연계에 관한 주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A. M. Slaughter et 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2(1998), pp. 367-397을,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연구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3(2000 Summer)의 특집 ‘Legalization and World Politics’의 제 논문을 각각 참조.

3) 이 글에서 세력균형을 balance of power의 번역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붙여 ‘세력균형’이라 표기한다. 근대 주권국가 체제의 일반적인 운용원리 혹은 정책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생략한다.

학의 핵심원리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동아시아에 세력균형은 애초에 국제법의 일부로 소개되었다. 이후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관계설정의 핵심은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국제정치·국제정치학과 국제법·국제법학의 영역에서 세력균형을 어떻게 올바르게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력균형 개념의 학제를 횡단하는 이동을 지표로 사용하면서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관계의 변화를 추적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현황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라는 연구 과제를 ‘세력균형의 개념사’를 통해서 분석한 연구 성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에 관해서는 사카이 테쓰야(酒井哲哉)의 일련의 연구가 독보적이다. 사카이는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정치학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다는 통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기에 일본에서 다원주의적 국제정치학이 내재적으로 생성되었고 이후 이 흐름이 이어졌다는 논의를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전개하였다.⁵⁾ 본고는 사카이의 논의에 적지 않게 의존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면에서 그의 연구의 외연적 확

4) 국제정치학을 학문으로서 확립시킨 대표적 학자인 한스 모겐소의 논의에 있어서 세력균형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를 들어,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1966), pp.161-215를 참조

5) 酒井哲哉 “『東亞協同體論』から『近代化論』へ” □□年報政治學1998□□ 東京:岩波書店(1999年); 酒井哲哉 “□□國際關係論□□の成立—近代日本の立場から考える” □□倉文□□ 431號(2001年); 酒井哲哉 “國際關係論の成立と國際法學—日本近代史研究からの一考察.” □□世界法年報□□ 22號(2003年)등을 참조.

장을 시도한다. 본고의 주제를 해명하기에 사카이의 연구는 첫째, 연구 지역이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 한정되어 동아시아 차원의 유기적인 변화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 둘째, 연구 시기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정되어 근대 이후의 전체상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력균형의 개념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장인성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⁶⁾ 장인성은 세력균형 개념의 근대 한국에의 수입 과정을 추적한 후, 그 수용과 변용을 ‘균세(均勢)’와 ‘정립(鼎立)’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장인성이 ‘세력균형의 개념사’라는 낯선 주제에 대하여 상당한 완성도를 가진 논의를 전개한 점은 틀림없으나 국제법·국제정치 분야의 관계변화와 세력균형의 개념과의 관련성의 문제는 그의 논의에서 누락되었다. 그는 “‘균세’개념의 탄생은 □□만국공법□□의 자연법적 국제법의 이미지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균세’는 ‘만국공법’의 법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치적 공공성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다”라고 하여 ‘균세’가 그 수입된 당시부터 국제정치의 원리의 표현으로 표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만국공법□□에 있어서 ‘균세’는 국제법적인 개념으로 변형되었고 따라서 이 해석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가 □□만국공법□□의 시기에서부터 ‘균세’가 원래 있어야 할 국제정치의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한 결과 그의 논의에서 세력균형 개념과 국제법·국제정치 분야의 문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세력균형의 개념사와 국제법·국제정치 분야의 복잡한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 점에서 본고는 세력균형의 개념사 연구의 공백으로 메우는 시도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상기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주제 각각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두 연구주제의 종합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 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을 시도

6) 장인성 “근대 한국의 세력균형 개념- ‘균세’와 ‘정립’-” □□세계정치□□ 25집2호(2004年).

한다.⁷⁾

제 3 절 개념 규정: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

19세기 자유주의자 콕든(Richard Cobden, 1804-1865)은 세력균형을 “표현된 바 없고, 표현될 수도 없으며 이해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키메라(chimera)”라고 서술했다.⁸⁾ 권력(power), 자유(liberty), 정의(justice)등 중요한 정치학의 개념들이 그러하듯이 세력균형에 대해서도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해 왔고 또한 정의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본고는 세력균형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고가 아닌 관계로 세력균형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으며 또한 이 과제는 저자의 능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다만, 본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세력균형 이해의 한 측면, 즉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 분야의 분리라는 시각에서 세력균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른스트 하아스(Ernst B. Haas)는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고전적인 세력균형에 관한 연구에서, 유럽의 세력균형 개념에서 ‘힘의 배분’, ‘평형’, ‘패권’, ‘안정과 평화’, ‘불안정과 전쟁’, ‘권력정치’, ‘역사적 보

7) 덧붙여, 본문의 각 장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로서는 김용구(□□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동양 禮와 서양 公法□□ 서울: 나남출판, 1997년 등), 이근관(“동아시아에서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고찰 - □□만국공법□□의 번역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9권2호(2002년)), 텐타오(田濤 □□國際法輸入與晚清中國□□ 濟南: 濟南出版社, 2001년), 일본의 동아시아근대사학회의 여러 연구자들(『特集 萬國公法の受容と適用』 □□東アジア近代史□□ 二號(1999년); 『特集 アジアにおける近代國際法』 □□東アジア近代史□□ 三號(2000년)의 제 논문), 하우랜드(Douglas R. Howland, *Translating the West: Language and Political Reason in Nineteenth Century Japan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등의 성과를 들 수 있다.

8) Richard Cobden, *The Political Writings of Richard Cobden*, London: T. Fishier Unwon, 1903, reprinted, New York: Kraus Repring(1969).

편 원리’, ‘정책결정의 체계 및 지침’등 여덟 가지 뜻을 추출했다.⁹⁾ 이 포괄적인 정의에서 국제법과 관련된 의미는 전혀 등장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양 근대 이후 세력균형은 국제법이 아닌 국제정치의 원리로 이해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개막과 함께 유럽의 국제관계는 기독교 혹은 황제권이라는 보편적인 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들이 국가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상호 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질서’를 지휘부에 의해 수립되고 어떤 초월적 중심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강제되는 구속적 규범에 대한 복종에 의해 만들어지는 획일적인 행동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질서는 웨스트팔리아 체제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 국제관계는 본래적으로 상층부가 개방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항상 불확정적이고 내재적으로 위험한 것이었다. 17-18세기, 유럽대륙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전쟁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의 현현이었다. 따라서 근대 국제관계에서의 질서와 평화는 국가들의 상위가 아니라 수평관계에 있는 동격(同格)의 국가들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탐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여 등장한 학문분야가 국제법학이었다.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의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1625)은 신과 황제가 아닌 법에 기대어 국가들 간의 규범적 질서를 이루려는 노력이었다. 한편, 국제법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국제관계의 질서를 탐색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국제법은 근대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이었지만 윤리도덕의 영역에서부터 질서를 만든다는 생각은 여전히 중세적이었다. 근대 정치를 발견한 이들 - 말할 것도 없이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1469-1527)가

9) Ernst Haas, “The Balance of Power: Prescription, Concept, or Propaganda,” *World Politics* 5(July 1953), pp.447-459.

그 선구자이자 대표자이다 -은 이와 반대로 윤리도덕의 영역과는 절연된 권력의 영역에 주목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이 권력의 영역에서 새로운 질서 구축의 원리를 생각하는 정치가·사상가들이 등장하였는데 그들이 제창한 중심 원리가 다름 아닌 세력균형이었다.¹⁰⁾ 하지만, 세력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20세기 이전에는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실용적인 기술-외교술-로서 면면히 이어졌다.¹¹⁾

이와 같이 근대에 있어서 윤리적 규범을 통하여 근대국가를 제어하자는 국제법의 논리와 근대국가가 윤리적 규범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의 균형상태를 통하여 근대국가를 제어하자는 국제정치의 논리는 전제와 대안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은 명확하게 분리되었고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할 때 세력균형을 국제정치의 원리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영역은 구별되어 있고 세력균형은 국제정치 영역의 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 둘째, 세력균형의 원리는 권력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국제관계에 무질서와 혼란이 아닌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원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근대 이후의

10) 국제법학자인 레오 그로스(Leo Gross)는 웨스트팔리아 체제 하에서의 평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주권 국가들 상위에 존재하는 권위체 또는 조직에 관한 관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 .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국제법과 세력균형-즉 국가들의 상위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기능하는 법과, 국가들 상위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권력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국제법과 대응되는 분야는 국제정치여야 할 것인데 그로스는 그 영역을 세력균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세력균형이 얼마나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Leo Gross,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in R. A. Falk and W. F. Hanrieder eds.,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An Introductory Reader*(Philadelphia, 1969), pp.53-54.

11) 세력균형 원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Edward V. Gulick,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 A Case Histor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One of the Great Concepts of European Statecraft*(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55); Francis H. Hinsley,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tates*(Cambridge Univ. Press, 1964)등을 참조.

제1장 서론

동아시아에 나타났던 다양한 세력균형 논의를 위 두 잣대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구체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제 2 장 □□만국공법(萬國公法)□□과 ‘균세(均勢)’

제 1 절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국제법 수용을 □□만국공법□□(1864)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은 약간의 전사(前史)를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서술 방식일 것이다. □□만국공법□□은 전달하는 정보의 양과 영향력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이전의 국제법 관련 저술들과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19세기 동아시아인의 국제관계인식을 상당기간 지배했던 이 국제법 저술을 통해서 ‘balance of power’ 개념이 한자어로 번역되었고 그 번역어가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본 장에서는 청일전쟁 이전의 시기를 대상으로 세력균형 개념의 동아시아에서의 최초의 수용과정에서 □□만국공법□□의 번역자 마틴(W. A. P. Martin, 1827-1916)이 만들어낸 국제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 영역을 둘러싼 혼란을 확인하고 이러한 혼란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이해, 혹은 오해되었던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국제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의 미분화(未分化)가 그려질 것이다.

제 2 절 □□만국공법□□에서의 ‘균세’의 위치

□□만국공법□□에 있어서 ‘balance of power’ 번역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주목되어왔다. 그 초점은 번역자인 마틴이 할주(割註)를 삽입하는 것을 통하여 휘튼(Henry Whaeton, 1785-1848)의 원저(*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있지 않는 세력균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는 사실에 모아졌다.¹²⁾ 할주의 삽입은 중대한 변용임에 틀림없지만, 이

12) 김용구(1997), 57쪽.

중대한 변용의 등장하게 된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절에서는 원저와 번역에서의 ‘balance of power’ 관련된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마틴의 번역이 가지는 의미를 음미하려 한다.

휘튼은 ‘balance of power’가 등장하는 절인 ‘System of Heffter’에서 “공법은 아주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언제나, 그리고 현재도 유럽과 유럽에 기원을 가진 문명화되고 기독교인인 사람들(the civilized and Christian people of Europe or to European origin)에 한정되었다”라고 쓰고 있다.¹³⁾ 한편 마틴은 같은 절을 ‘해프터씨의 대강의 뜻(海氏大旨)’으로 번역하고 앞의 구절을 “대개 이 공법은 혹은 유럽의 기독교를 숭상하고 교화된 여러 나라에 한정되고 혹은 유럽의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옮겨간 곳에서 행해지고 이들 외에 이 공법을 받드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다.¹⁴⁾ 전자는 공법의 적용이라는 특권이 문명과 종교에 의해 유럽과 북미에 한정된다는 의미인데 반해서, 후자는 유럽과 북미에 이들의 공법은 한정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들의 공법을 받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휘튼은 보편적 기준에서 뛰어난 서양과 뒤떨어진 나머지 지역의 차별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지만, 마틴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지역이 각기 다른 공법을 가진다는 의미로 오역하였던 것이다. 보편과 차별의 문명(civilization) 담론이 특수와 평등의 문화(Kultur) 담론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오역은 ‘balance of power’가 등장하는 전후 문맥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휘튼의 원저를 살펴보자. 휘튼은 같은 장에서 아래와 같이 독일의 법학자인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 1779-1861)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13) Wheaton, Henr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ondon/Boston: Sampson Low Son & co./Little Brown Company(1857), p.14.

14) 惠頓, □□萬國公法□□上海: 上海書店出版者(2002年)[원저는 1864년], 8쪽.

기독교(Christianity)에 기반을 둔 문명(civilization)의 발전은 점차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몫의 호혜성이 없어도,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차 이와 닮은 법을 지키도록 안내해 왔다.¹⁵⁾

앞서 소개한 문명의 논의와 연관되는 이 문장에서 사비니는 기독교 나라인 서양제국이 다른 문명권의 국가에도 종교적 차이와 호혜성(互惠性)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제법에 따르도록 인도해 왔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휘튼은 기본적으로 사비니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문명권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 관점을 지지하면서도 더 최근의 구미의 기독교 국가들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과 이교도 국가들과의 교제를 보면 후자의 국가들이 그들의 독특한 국제 관습을 버리고 기독교세계의 관습(those of Christendom)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휘튼은 서양제국의 국제법의 적용 노력에 이어서 최근에는 상대방인 다른 문명권의 국가들이 나름의 국제예양을 버리고 기독교세계의 국제법을 채용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세계의 법의 문명으로서의 수용이라는 관계설정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서양국제법 수용에 대한 휘튼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

15)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founded on Christianity, has gradually conducted us to observe a law analogous to this in our intercourse with all the nations of the globe, whatever may be their religious faith, and without reciprocity on their part.” Wheaton (1857), p.20.

16) *Ibid.*

문이다. 이 절의 맨 마지막에 중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동일한 지적이 중화제국과 유럽과 미주의 기독교 국가들 간의 최근의 외교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만성적인 반교역적이고 반사회적인 원칙들을 버리고 전시와 평시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독립과 평등을 인정하도록 강요되었다.¹⁷⁾

우선 서양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전의 중국에 존재했던 관계의 양상에 대한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성적인 반교역적이고 반사회적인 원칙’이라는 평가에는, 중국이 휘튼이 생각하는 문명의 기준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이 이전의 원칙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의 원칙을 받아들인 것은 강요된(*has been compelled to*) 것이었다. 결국, 중국은 문명국이 아니었고 문명의 원칙인 국제법을 강요당했다는 것이 휘튼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제법 수용에 대한 마틴 번역은 위의 원문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구미의 기독교를 신봉하는 여러 나라들은 중국과 가까워져서 또한 조약에 대해 논의하여 중국은 이미 오랜 금지를 제거하고 각 국과 교제 왕래하여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모두 평등하고 자주적인 국가임을 인정하려 한다.¹⁸⁾

17) “The same remark may be applied to the recent diplomatic transactions between the Chinese Empire and the Christian nations of Europe and America, in which 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 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 and to acknowledge the independence and equality of other nations in the mutual intercourse of war and peace.” Wheaton (1857), p.22.

18) “歐羅巴, 亞美利加諸國奉耶蘇之教者, 與中國來亦共議和約, 中國既弛其舊禁與各國交際往來, 無論平時戰時, 要皆認之爲平等自主之國也.” 惠頓(1864), 9쪽.

먼저 중국이 버린 것은 오랜 ‘해금정책(海禁政策)’으로 번역되었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가치평가는 완전히 사라졌다. 가치평가가 사라짐과 함께 그 기초가 되는 문명의 논리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어 중국의 정책변화는 수동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재해석은 중국의 근대 국제관계에의 편입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마틴의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마틴은 ‘기독교의 정신(Spirit of Christianity)’을 중국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세속의 서책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국과 기독교 국가들의 차별을 숨겨야만 했던 것이다.¹⁹⁾

이러한 의도된 오역의 결과, 원 텍스트와 번역본의 문맥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했다. 앞서 본 것처럼 휘튼의 중국에 대한 논의는 문명화되어 있는 기독교 국가의 국제법을 받아들이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문제는 마틴이 중국의 경우에 그 반사회성이나 미개성 등의 가치판단을 없애고 능동적인 변화를 강조함에 따라 마틴의 번역본에서도 미개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온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과 이교도 국가들의 논의와 중국의 논의 사이에 단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번역본의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중국과의 차이를 설명할 담론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역할을 떠맡은 것이 다른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터

19) 마틴은 스스로의 번역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I was led to undertake ti, whitout the suggestion of anyone, but providentially I doubt not, as a work which might bring this atheistic government to the recognition of God and his Eternal Justice; and perhaps impart to them something of the Spirit of Christianity(밑줄은 필자).” in China Letters from the files of the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eking, #44, October 1, 1863(Ralph R. Covell “The Life and Thought of W. A. P. Martin: Agent and Interpreter of Sino-American Contact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Unpublished Ph. D. Paper, University of Denver(1975), p.218에서 재인용.)

키의 예였다. 그리고 ‘balance of power’와 그 번역어인 ‘균세(均勢)’는 바로 터키의 국제법 체제에의 편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우선 휘튼의 논의를 보자.

오스만 터키 제국의 독립과 통합성은 유럽의 세력균형(the European balance of power)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오랜 동안 인정되어 왔고, 그리하여 최근에는 그 제국을 유럽 공법의 범위 안에 넣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일반 약정이 되었다.²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터키가 국제법체제의 일원으로 인정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다. 휘튼은 이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세력균형을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 근접한 대제국인 터키가 유럽 국가의 어느 한편-특히 러시아-에 복속되거나 혹은 사라져 버릴 경우에는 유럽의 권력의 축이 한편으로 기울거나 권력의 거대한 공백이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 유럽 5대 열강 간의 권력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평화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두려워 한 유럽 국가들이 터키를 국제법체제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안정을 꾀한다는 논의였다. 즉, 유럽의 - 위 인용문에서 세력균형의 주체는 유럽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 권력정치의 필요성이 터키의 국제법적인 지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또한 휘튼이 세력균형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주석도 달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휘튼은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던 예를 따라서 ‘balance of power’를 국제정치

20)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the Ottoman Empire have been long regarded as forming essential elements in the European balance of power, and, as such, have recently become the objects of conventional stipulations between the Christian States of Europe the Empire, which may be considered as bringing it within the pale of the public law of the former.” Wheaton (1857), p.21.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마틴의 번역은 이와는 적지 않게 다른 것이었다.

유럽제국은 항상 터키의 독립과 통합이 균세의 법(均勢之法) - 소위 균세의 법이라는 것은 이에 강국이 그 세력을 균평하게 하여 힘에 기대어 서로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소국이 이에 의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태평의 요술 - 에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터키와 서로 맹약에 대하여 논의하여 터키인들은 유럽의 공법에 복속하였던 것이다.²¹⁾

터키의 유럽의 공법에의 복속은 ‘균세지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 세력균형의 번역어에 대하여 마틴은 원저에 없던 주석을 달고 있다. 윤리도덕과 관계없이 안정을 낳는 근대적인 원리인 세력균형 개념을 동아시아에 소개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개념의 번역과 그에 대한 주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가에 있었다.

먼저 번역어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틴은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balance of power’를 ‘균세(均勢)’라고 번역하지 않았다. 그는 ‘균세지법(均勢之法)’이라고 번역했다. 번역어에 이어지는 그의 주석이 “소위 균세지법”으로 시작하는 것에서도 그의 번역어가 ‘균세지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휘튼에 있어서는 정치적 원리였던 ‘balance of power’가 마틴의 번역에 있어서는 ‘균세’라고 하는 ‘법’으로 변환되었던 것이다. 그 법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국제법의 원리였음은 말할

21) “歐羅巴諸國，常以土耳其之自主不分裂與均勢之法 所謂均勢之法者，乃使強國均平其勢，不肯以相凌，以弱國賴以獲安焉，實爲太平之要術也。大有相關，故與土國互相共議盟約，土國人以服歐羅巴之公法也。” 惠頓(1864), 9쪽.

것도 없다. 둘째, ‘균세지법’의 지역적 한정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휘튼의 저서에서 세력균형은 ‘the European balance of power’라는 구문으로 나타났는데 이 구문에서 세력균형은 유럽국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마틴의 번역에서는 ‘European’이 주어로 쓰이면서 ‘balance of power’가 ‘European’에 직접적으로 한정되는 뜻이 사라져 버렸다. ‘균세지법’은 유럽이라는 지역과의 관련성을 버리고 보편적인 원리인 것처럼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어 주석을 보자. 세력균형에 대해서 “강국이 그 세력을 균평하게 하여 힘에 기대어 서로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소국이 이에 의뢰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태평의 요술”로 설명하고 있다. 마틴은 우선 ‘균세지법’의 원리는 ‘힘(勢)’의 작용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것을 서술한다. 마틴이 ‘균세’를 국제법의 일부로 위치지운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지만 그도 설명과정에서 그것의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본문에서 ‘균세’를 ‘법’으로 소개한 것과는 달리 주석에서 ‘술(術)’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중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틴의 주석에도 세력균형의 원리에 대한 곡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석에서 마틴은 세력균형을 강국과 약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정의 논리로 소개하고 있다. 마틴의 설명은 일견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이라는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이 명제의 타당성은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세력균형의 원리는 서구 제국 - 그리고 터키 - 에 있어서는 마틴의 설명대로 안정의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세력균형의 유지는 유럽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정과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유럽이 세력균형에 의한 100년 평화를 구가하던 19세기는 동시에 한편으로 식민지 쟁탈의 시대이기도 했다. 결국, 터키의 예는 무척 특이한 것으로 특수한 정치사적 맥락. 즉 유럽의 세력균형에 있어서

터키가 중요했다는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주석은 그 맥락을 사상하고 세력균형이 가지는 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유럽이라는 지역적 한정성이 사라져 버리면서 강국과 약국을 가리지 않는 논리- 즉 당대의 중국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로 변환되었던 것이다. 결국 마틴에 의하면 터키의 국제법 체제에의 편입은 더 높은 문명을 가진 기독교 제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법 원리인 세력균형의 적용의 결과로 이루어졌고 이 세력균형의 원리는 국력의 강함과 약함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마틴이 ‘balance of power’의 번역 과정에서 행한 위와 같은 변용의 결과 휘튼과 마틴의 텍스트 안에서 터키에 이어 등장하는 중국의 국제법적 위치와 관련된 논리의 문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휘튼의 논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과 이교도 국가, 터키,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삼 단계 논의의 진행은 연속적인 것이었다. 한편, 마틴의 논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과 이교도 국가와 터키 사이에 단절이 나타나고 터키의 논의와 중국의 논의가 연결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세력균형의 보편적인 국제법의 원리로의 오역은 중국이 국제법을 강요당하고 있는 미개의 국가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논리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국공법□□의 범례에서 마틴은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번역이 다소 장황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요약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료한 설명을 위하여 조금 부연하기도 하였다.²²⁾

22) 惠頓(1864), 4쪽.

세력균형의 번역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틴은 삭제와 요약과 부연을 행하였다. 더하여 그가 말하지 않고 있는 오역도 행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오역은 그가 의도했다고 하는 상황함의 회피나 설명의 명료화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중국의 관련성, 혹은 국제법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치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만국공법□□은 국제법의 교과서로서는 최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비유럽지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다른 서양의 국제법 서적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휘튼이 ‘창조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의 창안자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당대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의 편견은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마틴은 여전히 중국적 세계질서의 가치를 믿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국제법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휘튼의 원저에 나타난 차별적이고 수동적인 중국의 상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 마틴은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비유럽국가들의 모임에서 중국을 구제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틴이 □□만국공법□□에서 성리학적·자연법적인 측면을 강조함을 통해서 국제법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필요 때문이었다. 국제법의 보편성 강조가 저서 전체에서 한 역할을 중국의 국제법적 위치를 규정하는 제10절에서는 ‘balance of power’의 국제법 개념으로의 번역과 원리적인 해설이 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틴의 ‘balance of power’의 번역과 해설은 아마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을 부산물을 낳았다. 그의 오역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중국의 서양국제법 수용을 도왔지만 장기적으로 수용의 불안정성이라는 부(負)의 유산을 남겼다. 중국을 비롯한 비유럽제국이 완전히 평등하게 서양의 국제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마틴의

번역에 따라서 만국공법을 보편적 국제법으로 이해하고 ‘균세’를 그 평등한 적용을 추동하는 국제법의 일부로서 받아들였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서양과 비서양의 엄존하는 차별을 인식하게 될 경우 보편적인 만국공법으로 이해된 국제법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균세’ 개념은 스스로가 속한 거대한 문맥(context)인 만국공법의 위상 변화에 연동하여 재고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 3 절 □□만국공법□□의 ‘균세’의 전파와 이해

□□만국공법□□은 중국에서는 물론 조선과 일본에도 알려져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인들의 국제법과 국제관계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만국공법□□의 전파와 수용은 동시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균세’ 개념의 전파와 수용을 의미했다. 하지만, 비록 마틴에 의해서 강조되었다고 할지라도 ‘균세’ 개념이 □□만국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번 등장하고 있고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소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대의 독자들이 ‘균세’에 어느 정도 주목하였고 또한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과제일 것이다.

① 국제법 원리로서 균세 해석의 지속

마틴의 국제법 개념으로서의 ‘균세’ 소개를 충실히 받아들여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적용하면 어떠한 논의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예를 정관잉(鄭觀應, 1842-1922)의 논의에서 볼 수 있다. 1894년 출판된 □□성세위언(盛世危言)□□의 “공법(公法)”편에서 정관잉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공법은 피차가 스스로 그 나라를 만국의 하나라고 인식하여 가히 서로 맺어 서로 통합하거나 속국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맺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법(性法)과 예법(例法)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무릇 언어와 문자, 정교와 풍속이 원래 억지로 같게 하기가 힘들지만 시비(是非)와 호오(好惡)의 공(公)은 서로 심하게 멀지 않는다. 따라서 사신을 통하는 법과 통상의 법과 동맹과 회합을 맺는 법이 있다. 세속에 특별히 숭상함을 있을 수 있지만 법이 아니면 맺어질 수는 없다. 서로 통합하거나 속국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로지 성법을 주로 하여 말하는 것이다. 무릇 각 국의 권리는 군주가 되었건 민주가 되었건, 군민공주가 되었던 관계없이 모두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바로 타인이 침탈할 수 없는 것이다. 성법 중에서 결코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을 위한다고 감언하여 약탈하는 이치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균세의 법과 상호보호의 법이 있는 것이다. □□이아(爾雅)□□의 석훈(釋訓)에서 말하기를 법은 항상 한 것이라고 했으니 항상 지켜야 한다.²³⁾

정관잉은 공법을 ‘성법’과 ‘예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성법’은 ‘natural law’의 번역어로서 이미 □□만국공법□□에서 보인다. 그에 대비되는 ‘예법’은 실정법(實定法)에 해당한다. 정관잉에 있어 ‘균세의 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법을 구성하는 일부인데 국제법의 하위범주인 ‘성법’과 ‘예법’ 중에서도 더욱 윤리도덕의 측면이 강한 성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균세의 법’은 ‘상호보호의 법’과 함께 침탈을 방지하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균세의 법’은 중국고전 13경(經)의 하나인 □□이아□□가 법 해석의 기준으로 인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을 가로지르는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관잉의 ‘균세’ 이해는 마틴의 □□만국공법□□의 ‘균세’ 개념이 자연법적으로 해석된 국제법의 일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연장선

23) 鄭觀應, □□盛世危言□□ 鄭州: 中州古籍出版社(1998年), 146쪽[원저는 1894년].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틴의 경우와는 달리 정관잉에 있어서는 ‘balance of power’의 원 뜻인 국제정치학의 원리로서의 측면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만국공법□□이 출판되어 30년이 경과된 후에 당대를 대표하는 서양통인 정관잉이 세력균형을 마틴보다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연법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은 그가 가진 서양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고려하면 의외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해석은 그가 근대 국제관계의 권력정치적 특성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같은 ‘공법’편에 이어지는 다음의 문장을 보도록 하자.

따라서 공법은 만국의 하나의 거대한 화약(和約)이라고 말한다.
우리 중국은 해금을 크게 열고그런데 맺은 조약에 통상 하나를 통해서만 보아도 어찌 그렇게 모순이 많은가? 만약 한 나라에 유리하다면 각 국이 균점한다는 말은 무슨 예이나?
여러 가지가 정리에 맞지 않으니 공(公)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법(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공법가가 오히려 크게 특별히 쓰기를 “1858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네 나라가 중국과 입약한 것으로 이후 중국을 공법의 밖에 둘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 또한 주석을 더하여 명확하게 말하기를 함께 공법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 그 속임의 심함이어!24)

정관잉은 우선 공법의 보편성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전제하고, 이 신뢰에 중국의 국제관계를 비추어 보았다. 즉, 보편적인 만국공법 하에서 중국이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앞서 지적한대로 마틴이 번역과정에서 원저자인 휘튼의 논의를 윤색하고 그 과정에서 ‘균세’를 변형시키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해서였다. 정관잉은 서양과의 국제관계의 경험에 의하여 마틴의 윤색이 가진 문제점을 파

24) 鄭觀應(1894), 148쪽.

악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문제를 제기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관잉은 이어서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의 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한다.

대개 국가의 강약이 서로 동등하면 즉 공법에 의거하여 서로 유지하는데 만약 너무 강하고 너무 약하면 공법은 반드시 행해질 수 없다. 이로써 보면 공법은 여전히 헛된 이치에 기대이니, 강자는 그 법을 잡아서 사람을 묶고 약자는 반드시 참고 굴욕을 받을 면할 수 없다.²⁵⁾

정관잉이 제시한 국제법상의 차별의 원인은 결국 권력에 있었다. 그것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제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장만을 통해서 본다면 정관잉은 국제정치에서의 힘의 배분이 국제법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대 서양의 다수의 지식인들도 동의할 것이었고 그들의 언어로 정관잉의 생각을 표현하면 아마도 ‘balance of power’가 ‘international law’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깨달은 정관잉의 논의에서는 당연히 선행하는 원리인 ‘균세’가 국제법에서 분리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대로 정관잉에 있어서 ‘균세’는 여전히 국제법적인 논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정관잉이 ‘balance of power’의 기의(sinifie)를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마틴의 ‘균세’의 기표(sinifiant)를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관잉은 위의 자신의 논의의 내용이

25) 鄭觀應(1894), 148쪽.

‘balance of power’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이 중국어로는 ‘균세’로 번역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것이 정관잉이 ‘balance of power’라는 개념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balance of power’와 ‘균세’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지 혹은 그가 이 사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그의 글에서 ‘balance of power’의 기표와 기의가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된 결과, 충분한 지식이 제시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균세’의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이해라는 과제가 끝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마틴이 30년 전에 걸어 놓은 주문(呪文)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② 국제정치 원리로서 균세 해석과 그 한계

정관잉의 예를 통해서 서양에 대한 이해에서 앞서 갔던 인물의 ‘균세’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보았는데, 한편 당시 국제정치의 실무의 영역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에 있어서 ‘균세’는 어떻게 이해되고 또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었을까?

잘 알려진 대로 1882년 조선이 미국과 서양의 나라와는 첫 번째로 조약을 맺을 때부터 ‘균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청의 주일공사관은 1880년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1842-1896)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과 수교하는 것을 통하여 국제 협조체제를 갖추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외교론을 권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일청국대사였던 허루장(何如璋, 1838-1891)과 김홍집이 나누었던 필담(筆談)에 ‘균세’가 등장한다.

허루장 왈 근일 서양 각국에는 ‘균세의 법’이 있어서 만약 한 나라가 강국과 더불어 이웃하여 후환의 어려움이 있으면 각국과 더불어 연합하여 견제를 도모하는데 이것이 또한 급할 때 부득이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김홍집 왈 ‘균세’ 두 글자는 비로소 공법 중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²⁶⁾

허루장의 짧은 문장에서 ‘균세’의 이해의 두 가지 측면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첫째, 허루장은 ‘균세’를 말함에 있어 ‘균세지법’으로 쓰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만국공법□□에 등장하는 그대로의 표현이다. 즉 □□만국공법□□의 맥락에서 법적인 의미의 ‘균세’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허루장의 이해는 김홍집이 그의 말을 받아서 공법 즉 □□만국공법□□의 맥락에서 대응하는 것에서 김홍집과 공유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둘째, 허루장의 논의의 내용은 전략적인 고려가 전면적으로 강조된 외교정책이었다. ‘균세’는 성법의 일부로서 당연히 그래야 할 바(所當然)의 윤리적 원칙이 아니라 걱정거리(後患)를 미리 해결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허루장이 ‘균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조선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제법의 준수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정책 판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균세’를 둘러싼 법과 정치 영역의 혼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인 □□만국공법□□에 있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마틴은 휘튼의 저서에 있어서는 정치적 원리의 표현이었던 ‘균세’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성법’의 중요한 일부로 위치시키면서도 주석에서는 ‘균세’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가 아닌 마틴의 □□만국공법□□에 의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법의 탈을 쓴 정치의 논의를 전개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불합치는 다음 날 김홍집을 다시 만난 허루장이 “어제 말한 ‘균세의 법’은 또한 부득이한 일입니다”²⁷⁾라고 하여 따라야 할 법과 선택하여야 할 정책을 대비시

26) 송병기편역 □□개방과 예측: 대미수교관련 수신사기록(초)□□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년), 25쪽.

27) 송병기편역(2000년), 29쪽.

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하면서도 허루장이 김홍집에게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참의관 황준헌(黃遵憲, 1848-1905)에게 집필하게 한 메모가 유명한 『조선책략(朝鮮策略)』이었다. 이 글에서 위의 ‘균세’를 둘러싼 법과 정치의 경쟁의 일단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리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제국이 번갈아 와서 맹약을 치하고 있으니, 이는 곧 서양에서 이른바 균세의 설이다(泰西所謂均勢之說). 지금 천하만국은 중황으로 치고 물어뜯는 것이 전국시대보다 더 심하며, 열국은 별이나 바둑알처럼 널려 있는데 (나라를 - 필자) 무사히 지켜가려면 반드시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은 가운데 서로 유지해 나가야 가능하다. 진실로 한 나라가 있어 (다른 나라를 - 필자) 병합하게 되면 힘이 두터워지고, 힘이 두터워지면 세력이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다른 나라 또한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²⁸⁾

‘균세’에 대한 설명은 힘이라는 독립변수와 편안함이라는 종속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표를 사용하면서 기의에 남아 있던 국제법의 측면을 완전히 사상하여 국제정치로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으로 이는 마틴의 국제법적인 해석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이 점은 마틴과 정관잉의 경우와는 달리 황준헌에 있어서는 ‘균세’가 ‘균세의 법’이 아닌 ‘균세의 설’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균세’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일탈해 국제정치의 원리로 새롭게 정립된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으나 이것이 곧 세력균형을 본래의 의미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새로운 실패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글에서 황준헌이 ‘균세’를 서양의 근대사가 아닌 중국의 전국시대(戰國

28) 송병기편역(2000년), 154쪽.

時代)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균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생하고 성장한 유럽의 역사가 동원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준셴은 ‘균세’를 서양 근대의 그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이때 그가 선택한 역사가 중국 전국시대의 역사였다. 권력을 둘러싸고 투쟁하는 국제관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두 시대는 확실히 유사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황준셴의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균세’와 관련하여 볼 때 두 시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그 차이는 두 시대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권력과 안정·불안정의 관계설정에 있었다. 전국시대에 있어서 국제관계의 권력은 온전히 불안정의 원리였다. 국제관계에서 안정은 결국 열국의 분립 상태를 없애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것을 통해서만, 즉 권력의 분립을 전제로 하는 국제관계 자체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서양 근대에 있어서 권력은 불안정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안정의 원리이기도 했다. 서양 근대의 국제관계에서는 유럽의 통일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상태를 통한 안정이 목표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권력과 안정·불안정의 관계설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국가와 국가의 관계 맺음과 관련된 양상도 동일할 수 없었다. 전국시대의 합종연횡이라는 외교술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 의도했지만 그 것이 지향한 장기적인 목표는 중국의 통일을 통한 안정이었다. 한편, 서양 근대에 있어서 외교는 권력의 균형을 통한 안정의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합종연횡은 통일의 수단이었던 반면, 외교는 안정된 분립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결국 합종연횡은 정책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균세’라는 원리가 아닌 외교술과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물론 그 합종연횡의 목표는 균형이 아

닌 통일이라는 점에서도 세력균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원리였다. 하지만 황준셴은 전국시대의 유비(analogy)의 연장선상에서 ‘균세’를 합중연횡으로 서술했다.²⁹⁾

이러한 오해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합중·연횡을 외교술이 아닌 원리인 세력균형과 동일시하는 것은 세력균형 개념의 왜소화와 연관되는 듯 하다. □□만국공법□□에서 ‘균세’가 자연법적 국제법의 일부로 소개됨에 따라 ‘균세’는 자신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질서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었다. 하지만 황준셴은 ‘균세’를 국제법이 아닌 국제정치학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곧 황준셴에 있어서 ‘균세’는 성법과의 연결고리를 잃었고 더 이상 보편적인 원리의 표현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세’가 형이상학적 질서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곧 표면적으로 드러난 권력의 술책의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상황의 도래를 의미했다. 현실적인 방책이라는 측면에서 세력균형에 기반을 둔 외교술은 그 결과에 있어서 합중연횡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둘째,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의 무시의 원인은 서양의 세력균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의 불철저함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중국인의 믿음은 꼭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세력균형이라는 원리가 나고 자란 역사적 배경은 이 것과 전혀 다른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즉, 여러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위에 안정된 국가간의 체제를 만드는 것을 시도했으며 세력균형은 그 하나의 해답이었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황준셴이 국가의 분립을 인정하고 권력의 분립을 이용하여 안정을 유지한다는 발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균세’를 합중·연횡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에

29) 실제로 『조선책략』에도 합중이 등장하고 있다. 송병기편역(2000년), 47쪽.

대한 이해가 철저하지 못했거나 혹은 현실적 필요성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에 수입된 합중연횡으로서의 ‘균세’ 이해는 이후 널리 퍼져 나갔다. 김홍집은 국왕 고종에게 보고한 문견사건(聞見事件)의 별단(別單)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합중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어 정부의 최고 관료들이 합의한 문서인 제대신헌의(諸大臣獻議)에서도 ‘균세’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을 합중으로 적고 있다.³⁰⁾

□□만국공법□□을 통해서 국제법 개념으로 알려진 ‘균세’는 『조선책략』에 이르러 결국 어울리지 않는 텍스트인 □□만국공법□□과 어울리지 않는 영역인 국제법의 외부로 떨어져 나왔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국과 조선에서는 여전히 문명의 기준이 동아시아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균세’가 새롭게 자리 잡은 지식체계는 이 개념이 태어난 서양 근대의 지식체계가 아니라 서양과는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발전하여 온 동아시아의 문명의 지식체계였다. ‘균세’를 원래의 맥락에서 권력 정치에 기반을 둔 평화의 원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스트팔리아 체제로 대표되는 서양근대의 국제관계와 그것에 대한 서양의 설명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도덕과 정치의 분리, 국제체제에 대한 국가의 선행 등 ‘균세’ 이해의 기반이 되는 지식의 다발은 동아시아인들 - 특히, 청과 조선의 지식인들 - 에게는 낯설거나 혹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균세’는 이해되어야 했고 『조선책략』을 만들어낸 허루장, 황준선은 □□만국공법□□의 ‘성법’에서 떨어져 나와 떠돌게 된 ‘균세’를 제자백가 중 중횡가(縱橫家)의 논의 속에서 위치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맥락에 ‘균세’를 집어넣어 이해하는 이 방법의 문제점은 서양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과 함께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

30) 송병기편역(2000년), 109쪽.

다. 중국에서 이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는 서양의 국제정치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주사절의 자리였다.³¹⁾ 그런 의미에서 초대 출사영국대신(出使英國大臣) 귀쑹타오(郭嵩燾, 1818-1891)의 논의에서 전국시대 열국간의 관계와 서양근대 국제정치의 차이에 대한 지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기보다는 필연이다. 귀쑹타오는 □□사서기정(使西紀程)□□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다.

근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독일이 대치하면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이 들 나라는 만국공법을 만들어 서로 신의를 다투고 나라의 사궐을 중시하고 있다. 정을 행하고 예를 다하여 질박하면서도 문채남이 있으니 춘추시대의 열국간의 관계와 비교하면 아주 많이 나은 것이다.³²⁾

귀쑹타오는 서양의 국제정치의 현실을 중국의 고대의 열국간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시각 즉, 앞서 보아온 허루장 등의 논의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서양의 국제관계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귀쑹타오가 보기에 서양의 국제관계의 평가할 점은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의를 지키고 예(禮)를 다한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수공이 가는 평가이지만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세력균형의 이해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그다지 발전된 논의라고 볼 수 없다. 귀쑹타오가 평가하는 점은 서양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이었다. 전쟁을 반복한다는 점은 인정한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17-18

31) 귀쑹타오의 중국과 서양 그리고 일본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는 佐々木揚, □□清末中國における日本觀と西洋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2000年)의 第二章 『郭嵩燾の中國論と西洋觀・日本觀』을 참조.

32) 錢種書主編, □□郭嵩燾等使西記六種□□ 北京: 三聯書店(1998年), 68-69쪽.

세기에 끊이지 않았던 열강간의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후대에 긴 ‘100년의 평화(Hundred Years’ Peace)’라고 불리던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³³⁾ 그리고 이 평화를 가져온 원리야말로 세력균형이었다. 권력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또한 안정을 가져오는 원리를 생성할 수도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귀쑹타오의 서양의 국제관계에 대한 관찰은 아직 피상적이었다. 따라서 귀쑹타오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쟁의 상황 - 즉 도덕적, 윤리적인 한계를 넘어선 장 - 을 묘사할 경우, 그의 논의는 춘추시대의 열국 간 관계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권력정치의 비참한 현실을 전쟁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고대와 당대라는 시간의 벽, 그리고 중국과 서양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공통된 것이었다. 권력정치의 어두운 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평화의 구축의 가능성과 그 원리로서의 세력균형의 재인식은 귀쑹타오의 논의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제 4 절 나오며

국제정치의 핵심적 원리인 ‘balance of power’는 □□만국공법□□에서 ‘균세’로 번역되어 동아시아에 알려졌다. 번역자인 마틴은 ‘균세’에 대하여 한편으로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제법의 한 원리로 위치시켰다. 이러한 상충하는 소개를 통하여 ‘균세’는 □□만국공법□□ 속에서 중국의 국제법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은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한편으로 이 의도된 오역은 동아시아에 ‘balance of power’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커다란 역사적 과제를 남기고 말았다.

33) ‘100년의 평화’의 시대와 그 시대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역할에 대해서는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MA: Beacon Press(1957) [박현수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민음사, (1991년)]의 제1장을 참조

□□만국공법□□을 통하여 ‘군세’가 소개된 이후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중국에서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결국 마틴의 ‘군세’에 대한 국제법적 설명과 국제정치적 설명의 한쪽을 발전시키는 것에 머물렀고 끝내 마틴의 번역을 극복하고 세력균형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만국공법□□이라는 텍스트의 위력, 그리고 여전히 동아시아 문명이 이해의 기준으로 군림하는 상황 하에서 ‘군세’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완전한 분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제 3 장 국제법학(國際法學) · 국제정치(國際政治)와 ‘군세’

제 1 절 들어가며

청일전쟁 이전의 조선과 중국에 존재했던 ‘군세’에 대한 이해와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분리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극복되어가고 있었다. 첫째, 메이지 일본에서는 국제법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만국공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텍스트가 아닌 여러 텍스트의 하나로 상대화되어 갔다. 유학생의 파견과 서양인 고문의 채용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의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만국공법□□이 전해준 지식은 더 깊게 이해되며 극복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문명론의 개략(文明論の概略)□□(1875)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서양이 문명의 기준이 되었다. 서양이 문명의 기준이 된 이상 서양의 문맥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 조선과 중국의 경우와 달리 세력균형에 대한 오해의 완전한 극복, 그리고 국제법 · 국제법학과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의 근대적 구분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우선 메이지기 일본에서의 이와 같은 가능성의 실현, 혹은 좌절의 실상을 추적하려 한다. 이어 청일전쟁 이후 문명의 기준이 서양으로 변화한 조선과 중국에서 일본에 의해서 재구성된 세력균형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형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국제법학의 등장과 ‘군세’의 위상 변화

일본의 국제법 수용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문텍스트를 통한 사상연쇄의 망을 통한 수

용이 있었다. 영어로 쓰인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가 한문으로 번역된 □□만국공법□□이라는 텍스트로 일본에 수입되어 열광적으로 읽힌 것은 이 경로를 이용한 수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⁴⁾ 두 번째의 경로는 지역적으로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언어적으로는 한문을 거치지 않고 서양에서 직접 배우는 경로였다.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는 이 경로의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니시는 1862년에 막부에 의하여 네덜란드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라이덴(Leiden)대학에서 주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만국공법□□이 막말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될 당시 이미 서양에서 서양의 언어로 국제법을 연구하는 경로도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경로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후자였고 이 경로를 통한 국제법 습득을 통해서 일본은 독자적인 국제법 이해를 심화시켜 나갔다.³⁵⁾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메이지 일본이 직접 국제법을 이해해 감에 따라 조선·중국의 국제법 이해와 일본의 국제법 이해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괴리의 상징적인 표현이 국제법 영역을 나타내는 용어의 변화였다. ‘만국공법’은 □□만국공법□□이라는 특정한 텍스트를 나타내는 고유명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제법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였다. ‘만국’이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어에는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는 보편성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1870년대에 들어오면 만국공법이라는 용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877년 마틴은 울지(Theodore Dwight Woolsey, 1801-1889)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1860)를 □□공법편람(公法便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international law’가 만국공법이 아닌 공법으로 번역된

34) 일본에서의 □□만국공법□□ 수용의 제상에 대해서는 尾佐竹猛, □□近世日本の國際觀念の發達□□東京: 共立社(1937年), 28-50쪽; 安岡昭男, 『日本における万国公法の受容と適用』 □□東アジア近代史□□ 第二号, 45-64쪽을 참조.

35) 두 가지 경로의 등장과 중요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東京: 岩波書店(2001年), 156-172쪽을 참조.

것을 알 수 있다. □□공법편람□□의 내용에서도 ‘international law’의 번역을 모두 만국공법이 아닌 공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의식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하지만, 이전부터 만국공법에 대해서 공법으로 약칭하던 관례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여 이 용어의 변화는 중국과 조선에서는 거대한 단절로 인식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같은 책의 번역에 있어서 일본의 태도는 중국과 조선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이었다. 1875년 미즈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는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붙이고 있다.

이 학문(學科)의 책은 이전에 미국인 마틴씨가 한문을 사용하여 같은 나라 사람 휘튼씨의 책을 번역하여 처음으로 이름붙이기를 만국공법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 후 또한 우리나라의 니시씨가 네덜란드의 휘셀링의 강의에 기반해 만든 원고를 상재(上梓)하여 만국공법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그 이름이 널리 세상에 전파되어 마치 이 책이 보통의 명칭인 것처럼 되었다. 그렇지만 자세히 원명을 생각해 보면 국제법이라는 글자를 충당하는 것이 (본래의 뜻에 - 필자)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고쳐서 국제법이라고 명한다.³⁷⁾

미즈쿠리가 말하는 ‘자세히 원명을 생각해 보면’의 구체적인 의미는 울지의 책에 국제법이 ‘기독교국간에 행해지는 법으로 만국공통의 법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³⁸⁾ 자신이 번역하는 저서의 저자가 세계의 일부인 기독교국만을 상정하여 쓴 책을 저자의 뜻과 달리 만국의 공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미즈쿠리가 제목을 새롭게 한 이유였다. 이 만국을 대신한

36) 穗積陳重, □□法窓夜話□□ 東京: 岩波書店(1986年), 183쪽[원저는 1915년].

37) Theodore D. Woolsey 著·箕作麟祥譯, □□國際法□□ 東京: 弘文堂(1875年), 卷一 例言.

38) 穗積陳重(1915년), 183쪽.

개념이 ‘국제(國際)’였던 것이다. ‘국제’라는 한자어는 나라를 뜻하는 ‘국(國)’과 사이를 뜻하는 ‘제(際)’로 구성되는데 막연히 나라들 사이라는 것만 상정되어 세계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는 사라졌다.

미즈쿠리가 강조하는 바인 국제법의 적용대상이 한정되고 동아시아 국가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마틴이 휘튼의 저서를 번역하면서 숨기려고 노력했던 내용이었던 것, 그리고 세력균형의 국제법 개념으로의 번역은 이 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다. 이제 마틴의 주술은 풀렸고 따라서 세력균형을 새롭게 이해할 여지가 마련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만국공법의 국제법으로의 변화는 국제관계를 둘러싼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의 등장을 의미했다. 첫째, ‘국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기독교국가들의 국제관계는 기독교 국가들의 국제관계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일까?’, 둘째, ‘비기독교국가에 있어서 국제관계는 어떠한 원칙 위에서 구성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미즈쿠리의 국제법 출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이 두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뒤따랐다.

우선 첫째 질문에 대한 전형적인 대답을 자유민권가였던 바바 타쓰이(馬場辰猪, 1850-88)가 1880년에 행한 “외교론(外交論)”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런데, 세계만국의 교제는 대별하여 두 가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유럽의 교제와 동양의 교제가 이것이다. 그런데, 또한 더욱 유럽의 교제는 작게 나누어서 셋이 된다. 야만의 교제(제1), 정부와 정부와의 교제(제2), 인민과 인민의 교제(제3)가 이 것이다. 이 제1은 단순히 한 나라 혹은 한 부족의 교제에 머물고 외국인은 적시하는 것이 특히 심하다. 따라서 옛날의 법률 중에는 결코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없다. 이는 만국공법 혹은 인종학을 강구하면 명확하게 아는 바인데 곧 야만의 교제라는 것이 거의 이와 같다. 제2는 외국과 교제를 함에 이르

지만 그 나라들의 인민의 사이에는 극히 소원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제왕의 교제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양국 제왕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면 곧 거병하여 서로 전후하게 된다. 이것은 인민 각자에게 조금도 교제가 되지 않음의 증거가 된다. 또한 더 한층 진보하여 제3에 이르면 그 제왕 각자 사이에서 혹은 작은 분쟁을 만드는 것이 있어도 인민의 여론에 배치될 경우에 결코 전쟁을 벌일 수가 없다. 어찌 오직 전쟁뿐이겠는가! 이 외의 것도 모두 그러하다. 즉, 지금의 영국, 미국, 프로이센, 프랑스 등의 제국이 이리하다 동양의 교제와 같은 것은 전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머물러 세 번째 즉 인민과 인민과의 교제와 같은 것은 조금도 아직 존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³⁹⁾

바바는 서양의 외교와 나머지 지역에서의 교제를 비교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의 논의에서 □□만국공법□□은 외국인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문명의 것으로 이해되어 야만의 교제와 구별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의 논의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교제가 서양의 국제관계가 가지는 인민적 특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반응은 반성만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된 반응은 자국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그 일단을 1884년10월 □□도쿄요코하마마이니치신문(東京横浜毎日新聞)□□에 게재된 “동양제국은 만국공법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東洋諸國は萬國公法の利益を分取せず)”⁴⁰⁾라는 논설을 통해서 살펴보자.

태서의 정치가는 걸핏하면 즉 만국공법은 공도정리(公道正理)를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들이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를 대함에 이르러서는 공법도 도리도 살피는 바가 없다. 따라서 저들이 말하는 바의

39) 芝原拓自等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東京: 岩波書店(1988年), 159쪽.

40) 芝原拓自等編(1988年), 226쪽.

만국공법이라는 것은 유럽과 미주의 두 주의 만국공법이고 저들이 말하는 바의 도리라는 것은 유럽과 미주의 두 주에 통용되는 도리라고 아시아 동방의 인민이 비평하여도 이에 대해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구미의 정치가는 세계에 세계 공통의 도리가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왜 아시아 동방에도 도리를 이용하는 길을 강구하지 않는가.⁴¹⁾

논자는 국제관계에서 만국공법이라는 특수가 보편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세계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고 일본은 서양의 정치가가 말하는 ‘바른 길이며 옳은 이치(公道正理)’인 만국공법이 적용되는 존엄한 정치체가 아니라 ‘대지의 노모스(der Nomos der Erde)’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당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현실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법과 도리가 구미에만 적용된다면 아시아에는 무엇이 남는가? 법과 도덕에게 버림받은 박토(薄土)의 국제관계는 어떤 원리에 의해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절실한 물음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권력정치의 이해와 적용이었다. 그 일단을 1885년 2월 □□아사노신문(朝野新聞)□□에 실린 “외교정략의 표준을 논함(外交政略の標準を論ず)”이라는 논설을 통해서 살펴보자.

마키아벨리씨는 이탈리아국 플로렌스의 사람으로 종교의 정치학(政事學)의 중흥의 시조이다. 그 설에서 말하기를 정치(政事)와 도덕(道徳)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정치의 선악은 도덕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것을 논의할 수 없고 오직 그 수단과 그 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고 이를 시비할 뿐이다.⁴²⁾

41) 芝原拓自等編(1988年), 229쪽.

42) 芝原拓自等編(1988年), 229쪽.

이 논설에서는 외교정략을 논의하면서 마키아벨리를 소개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창한 사상가로 소개되었고 이 위대한 사상가의 가르침에 따라서 외교 정책은 도덕이 아니라 정치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창되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도덕과 정치의 분리는 곧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영역의 분리를 의미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세력균형의 원리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하지만 위 논설에 보이는 마키아벨리를 통한 국제정치 영역의 독립에 대한 인식이 곧 세력균형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듯 하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마키아벨리의 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다음의 문장을 보라.

국내의 정치에 있어서는 도덕의 기본에 따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의 외교정략에 이르러서는 권모술수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⁴³⁾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명확한 구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정치와는 다른 비도덕적인 국제정치의 장에 대한 논의는 비도덕적인 원리에 의한 질서의 형성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정략의 차원, 즉 권모술수에 머물고 있다. 논자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논의가 그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도덕과 정치의 분립 후에 정치의 부분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정치의 장에서 어떠한 고유의 원리를 찾으려는 문제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타락하고 말았다.

43) 芝原拓自等編(1988年), 230쪽.

둘째, 당대에 유행하던 사회진화론도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았다. 위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스펜서씨가 말하기를 태고의 인민이 극히 몽매했을 때에 있어서는 도덕이 어떤 것인가를 분변하지 않고 오직 이기(利己)라는 하나의 법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회의 문명에 이름에 따라 이기의 마음은 점차 감소하여 이타(利他)의 정이 되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 진정 타인의 이익이 되면 만약 자신에게 해가 되어도 또한 돌보지 않음에 이른다. 오늘날 사람들의 교제를 봄에 대저 신의를 기본으로 하여 감히 이기의 한편에 빠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국가와 국가의 교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와 반대되어 대국은 소국을 누르고 강국은 약국을 능멸하여 서로 탈취하는 것을 일로삼아 다시 인의도덕을 돌아보는 바가 없다. 지금의 세계는 생존경쟁의 일대 극장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외교정략은 저 마키아벨리씨의 설과 같이 도덕기준 외에 있어서 정치를 움직여 송나라 양공의 전철을 밟아 생존경제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⁴⁴⁾

국제정치의 장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의 연장선 상에서 있는 것은 세력균형의 계승자인 메테르니히(Klemens Wenzel Lothar Nepomuk von Metternich, 1773-1859)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1898)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키아벨리와 전혀 사상의 흐름을 달리 하는 사회진화론의 대표자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였다.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의 전향 이후 일본 지식계를 풍미하고 있던 사회진화론은 생존경쟁의 법칙이라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전제로 국제정치를 인식한다는 면에서 논리구성의 방법에서는 세력균형의 원리와 닮아 있다. 하지만 사회진화론에 기반을 두어 구성된 국제정치의 장의 성격은 세력균형의 가정과는 물론 19세기 당시의 서양의 국제정치의 현실과도 괴리된 것이었다. 사회진화론이 상정하는 국제

44) 芝原拓自等編(1988年), 230-231쪽.

정치의 장은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법과 도덕이 사라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혼란이 그 주된 특징이었다. 권력 혹은 세력이라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로서 그와 관련된 미덕은 최대한의 확장이었지 균형의 유지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회진화론의 국제정치 인식은 유럽에 있어서는 이미 한두세기 이전 경험에 기반을 둔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지만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볼 때는 19세기의 상황을 적지 않게 반영하고 있었다. 유럽의 평화와 함께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의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공존하는 19세기의 현실에서 동아시아는 후자의 지역에 속해 있었다. 동아시아인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전쟁의 당사자로서 혹은 전장의 제공자로서 전쟁을 겪었고 그 속에서 생존을 염원했다. 이러한 실감을 가진 동아시아인들에게 세력균형보다 사회진화론이 현실감 있게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행위자(actor)에게 있어서 권력을 가진 이들의 균형은 스스로가 당면한 문제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취졌던 것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열등한 지위가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는 상황은 1897년 이후 ‘과분(瓜分)’의 위기에 직면했던 중국의 논의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기상황을 일찍이 인식하여, 1899년에 이미 “과분위언(瓜分危言)”이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 그는 무형의 과분과 유형적 과분이라는 틀을 설정하여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⁴⁵⁾ 량치차오는 1907(光緒 33)년 “세계대세 및 중국전도(世界大勢及中國前途)”라는 글의 첫 번째 절을 국제경쟁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국제관계의 양상을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⁴⁶⁾

45) 梁啓超, □□飲水室合集□□ 北京: 中華書局(1936年), 第二卷 四 19-43쪽.

46) 梁啓超(1936年), 第三卷 二十 2-7쪽.

그의 설명에 등장하는 국가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우세한 국가(優國)과 열세의 국가(劣國)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그가 상정한 열 가지 국제관계에서 우세한 국가들만의 관계는 단 두 가지였고 나머지 여덟 가지의 경우에는 항상 열등한 국가가 등장하고 있다. 이전의 “민족경쟁의 대세를 논함(論民族競爭之大勢)”(1902)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 바, 이 국가간의 경쟁은 균형을 가져오기보다는 일방의 복속과 일방의 팽창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가 이어지고 있었다.⁴⁷⁾

메이지 일본의 지식인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만국공법□□의 주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공법이 적용되는 않는 자국을 둘러싼 국제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장으로서 국제정치 영역은 명확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새롭게 발견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그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력균형은 재발견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의 강제 대신에 힘의 균형이라는 원리가 등장할 상황이 도래한 듯 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인 그리고 이어 청일전쟁 이후의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발견한 국제정치의 장은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들이 국제정치 영역에 주목하기 시작할 당시는 홉스봄(Eric Hobsbawm)이 ‘제국의 시대’라고 명명한 바로 그 시기 - 1875년에서 1914년까지 - 와 겹치고 있었다. 국제정치에서 질서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감각이 널리 공유된 상황이었고 그것 상황에 대한 설명력에서 사회진화론은 세력균형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의 완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47) 梁啓超(1936年), 第二卷 十 10-35쪽.

제 3 절 □□만국공법□□의 ‘균세’와 국제정치의 ‘균세’ 비교

앞 절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국제정치의 발견이 세력균형의 재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마도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인식의 면에서 서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을 통해서 안정의 원리로서 균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전까지의 부정확한 ‘균세’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현실의 면에서 스스로가 처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살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혼란스런 위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전자는 선구적인 인식에 있어서 후자는 이 인식의 확산과 응용에 있어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는 서양을 문명의 기준으로 삼아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항상 생존의 위기에 시달리는 식민지 후보에서 벗어나 세력균형체제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동아시아에서 이 두 가지 변화는 메이지 일본에서 일어나게 된다.

첫째의 변화를 메이지 정부의 사법성 외국인 고문, 알렉산드로 파테르노스트로(Alessandro Paternostro, 1852-1899)의 □□국제공법강의(國際公法講義)□□(1894)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⁸⁾ 파테르노스트로는 국제법 일반을 설명하는 이 저서의 제11장에서 ‘균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정치적 균세(혹은 국력평균 또는 국력평형)”이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48) 파테르노스트로의 생애에 대해서는 森征一, “お雇いイタリア人アレッサンドロ・パテルノストロの生涯(Appunti Sulla Vita di Alessandro Paternostro, Giureconsulto Italiano Dell'impero Giapponesse)” *Keio law review*(1975年)을 참조.

각 국가로 하여금 그 유형무형의 활동력을 행사하고 또한 다른 강국으로 하여금 기타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직은 어떤 사람이라도 필요로 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오직 두 가지 방법만이 있다. 즉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 간에 하나의 보통법을 정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고 말미암는 것을 의무로 하고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각 국가의 위법을 규찰할 수 있는 실력을 정비하여 모든 인류를 완전한 하나의 단체로 만드는 것.

두 번째, 일반 국가의 정략으로 하여 그 각자의 권력을 혹은 일정의 구역 내에 한정해서 실제상 다른 국가의 생존독립 및 평등을 해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을 소위 정치적 균세라고 한다.⁴⁹⁾

첫 번째 논의는 세계정부론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보이는 파테르노스트로의 과장된 문체는 국민국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에 이러한 논의는 그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리라. 따라서 파테르노스트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책으로 두 번째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방책이 바로 ‘정치적 균세’였던 것이다.

그가 □□만국공법□□의 ‘균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응당 정치적인 개념인 ‘균세’에 일부러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여전히 세력균형이 국제법의 원리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더하여 파테르노스트로는 정치적 균세를 세계정부론과 함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실현하는 원리로서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장을 안정

49) Alessandro Paternostro述 · 本野一郎譯, □□國際公法講義□□ 東京: 和佛法律學校(1894年), 93-94쪽.

의 구축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비도덕적인 권력의 원리에 의해 국제관계에 안정을 가져오는 원리로서 ‘균세’가 이해되었다. 국제정치의 장을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혼란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사회진화론적인 국제정치 인식의 주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상적 자원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국제정치 영역에서 행위자의 살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혼란스런 위기 상황이 아닌 나름의 질서를 가진 영역으로의 이동이 실제로 나타났다. 전술한 대로 19세기의 국제정치의 영역은 두 영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서양제국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근대국제정치의 영역과 그 이외의 문명권의 정치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이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전자의 팽창으로 인해 뺏어지게 되었는데, 이 때 근대국가는 서양 이외의 국제정치의 행위자에게 제국(帝國)으로 나타났다. 제국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근대 국제정치 영역에서 세력균형을 원리로 하여 구성되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타서양 제국들과 식민지를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서양 이외의 국제정치의 행위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제국 세력들의 반복되는 침략 속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장으로 이해되었다. 앞 장에서 보았던 동아시아인들의 사회진화론적인 국제정치 인식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인 국제정치적 현실에 기반을 둔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였던 것이다. 결국, 세력균형이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의제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식민지를 벗어나 세력균형체제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국제정치적 위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메이지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는 것과 함께 국제정치의 장에서 세력균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위의 파테르노스트로의 저서가 간행된 1894년은 청일전쟁이 시작된 시기였다. 1894년 6월15일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1844-1897)

가 수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보낸 문서를 보자.

이번의 조선 사변이 어떠한 결과에 이를 것인가는 지금 급히 단안을 내리기 힘들다고는 하나 만약 무사평정의 판국을 이룬다 해도 조선정부의 현 상황에서 예측해 보면 장래 어떠한 사변으로부터 어떤 현상을 낳을 것인가? 결국, 오래도록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할 때에는 또한 이번 같이 청국이 출병하면 우리나라도 또한 이에 응해서 출병하여 ‘균세’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날 것은 필지의 경우임에 이르러 결국 한청일의 갈등을 낳고 동양대국의 우란을 불러일으키는 우려가 없어짐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에 당하여 올바르게 한청일 사이에서 장래에 취해야 할 정책을 도모하여 오래도록 동양 대국의 평화를 유지할 길을 장구하는 것이 진실로 급한 임무라고 확신한다.⁵⁰⁾

무쓰는 장래에 조선의 혼란에 의한 세력균형의 파괴가 동아시아의 대국의 착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전쟁의 의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균세는 명백히 현실국제정치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는 결국 한중일 삼국의 세력의 균형을 통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균세’의 논의에서는 ‘조선의 세력의 저하→청 세력의 팽창→일본세력의 대응’이라는 권력의 연쇄만이 묘사되는 반면에 국제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국제법의 중요성을 방기하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청일전쟁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국제법의 준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실적을 알리던 전쟁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⁵¹⁾ 즉, 국제법을 무척 중시하

50) 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第四卷□□ 東京: 嚴南堂書店(1967年), 29쪽.

51)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가 청일전쟁의 국제법적 선전의 대표였다. 이들의 대외발신에 관한 간략한 정리는 明石欽司, “日本の國際法學『對外発信』の100年: 歐文著作公刊活動を題材に” 國際法學會編 □□日本と國際法の100年

며 전쟁의 전 과정을 통해서 국제법의 논의를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균세’는 국제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지역 차원의 세력균형의 일원이 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원리는 점차 현실감을 띠어가게 되었다. 일본의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자는 러시아로 바뀌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논의가 점차 빈도를 더해가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00년,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1844-1914)는 러시아가 마산포의 조차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러시아의 의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균세’를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마산포로부터 한국식 리로 약 30리 떨어진 토지를 요구하는 건에 관하여 전보 44호를 통해서 훈령을 받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대하여 균세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거문도 안에서 제국의 지보를 점거하여두는 것은 무척 긴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⁵²⁾

상대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세력균형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균세’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균세’를 통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인식은 러일전쟁 시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1905년에 발표된 시바하라 카메지(柴原龜二, 1867-1935)의 “강화조약의 가치(講和條約ノ價値)”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제7장 이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더욱 패전을 이어갈 때는 점차 유럽의 세력균형을 착란하고 동시에 과대한 세력을 부여하는 우려가 있

第 I 卷 國際社會と法と政治□□ 東京: 三省堂(2001年), 210-212쪽을 참조.

52) “露國의 馬山浦附近 土地要求에 관한 對策” 1900년3월28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강화를 성립시키려고 희망하는 열국은 평화적 위압으로 전쟁의 지속을 반대할 것이다.⁵³⁾

러일전쟁을 둘러싸고 서양제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력균형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의 ‘균세’의 논의가 일본을 주체로 하여 ‘균세’를 사용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는데 반하여 이 논의는 객관적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바하라 카메지의 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용어의 변화이다. 앞서 파테르노스트로의 ‘정치적 균세’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의 저작에는 균세의 법에서 정치로의 위치변화와 함께 ‘balance of power’의 번역어의 변화도 나타났다. 파테르노스트로는 세력균형을 소개하면서 ‘균세’와 함께 ‘국력평균(國力平均)’과 ‘국력평형(國力平衡)’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첨가하였다.⁵⁴⁾ ‘균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면서 ‘균세’가 가지는 독점적인 번역어로서의 위치가 점차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국력평균(國力平均)’과 ‘국력평형(國力平衡)’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balance of power’의 번역어가 아니다. 여러 번역어의 경쟁 속에서 초기의 번역어가 사라지는 것은 빈번한 일이었다. 시바하라의 글에서 세력균형이라는 현재 한국어, 일본어에서 ‘balance of power’의 번역어로 쓰이는 한자어 세력균형이 등장하고 있다. 세력균형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바하라의 용례는 그 무척 빠른 사용에 속한다고 보인다.

결국, 권력정치의 영역의 개념으로서의 ‘균세’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일본의 국제정치에서의 위상변화가 어우러져 세력균형은 서양에서

53) 柴原龜二, □□講和條約ノ價值□□ 大阪: 柴原龜二(1905年), 20쪽.

54) Alessandro Paternostro 述 · 本野一郎譯(1894年), 93쪽.

쓰이는 의미에 걸맞게 재해석되고, 또한 국제법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국제정치 현장의 개념으로서 재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이해의 기표로서 ‘세력균형’도 등장하였다. 세력균형에 대한 오랜 오해의 과정은 이렇게 극복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출발과정에서 새로운 오해의 원인이 등장하여 이후의 ‘세력균형’ 이해에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는데, 이어지는 절에서 이 조선과 중국에서의 ‘세력균형’ 이해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제 4 절 국제정치의 ‘균세’의 전파와 그 결과: 국제법학과 국제정치의 분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삼국은 서로 다른 국제정치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일본의 열강에의 진입에 의해 일본은 근대국가·제국의 일원이 되었고 조선과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이 되었다. 국제정치 개념으로서 세력균형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쓰였다. 이러한 특징은 제국의 팽창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과 청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이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 절에서 본 살펴보았던 무쓰 무네미쓰의 문서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보자. 이 품의 내용을 세력균형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품의의 날짜는 6월 15일인데, 이 날은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일청공동조선내정개혁안(日淸共同朝鮮內政改革案)’을 결정한 날이었다. 무쓰가 주장한 소위 개혁안은 청과의 전쟁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무쓰는 이미 전쟁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세력균형은 전쟁개시의 정당화의 논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리는 그것이 이해됨과 동시에

원리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현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력균형 원리의 정략적 이용은 유럽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유럽은 이미 안정된 세력균형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된 위에서의 논의였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력균형 체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또한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력균형을 전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세력균형에 대한 오도된 선입견을 갖도록 하여 세력균형 이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팽창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세력균형의 이용은 청일전쟁 이후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전형적인 예를 1907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연설을 통해서 살펴보자.

한일양국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서로의 이익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오직 양국을 위해서 생각하는 우리 천황폐하의 예려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뜻이 있음을 제군은 이해해야 한다. 한일이 힘을 합치면 동양의 평화를 도모하는 희망에 달함에 있어서 더 편의롭게 되는 바를 위함이 된다. 생각건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동양만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각국의 평화를 무시하는 뜻이 된다면 동양의 평화로서 다른 방면의 평화롭지 않음도 관찮은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먼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내의 균세(宇內ノ均勢)를 유지하는 것을 얻어서 우내의 균세를 유지하면 즉 세계를 지키는 것이 된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고 스스로 쇠약에 빠져 남을 향하여 평화를 위하여 진력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양국의 친화는 첫째로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둘째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게 된다는 우리 황제폐하의 심모원려의 심산을 이해하고55)(밑줄은 필자)

55) “釜山守谷ニ開催ノ歡迎會席上伊藤統監演說要領” 1909년1월8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연설에서 이토가 생각하는 조선 식민지화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의 정당화의 논리를 볼 수 있다. 그 논리는 일본이 동양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이었다. 1945년 패전 당시 세계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그만둔다고 선언한 쇼와 천황의 궤변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연설에서 세계평화는 ‘우내의 균세’로 표현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세계열강의 일원이 되었고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제국에게 있어 세력균형은 편안한 평화의 원리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력균형의 행위자가 아니라 세력균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어 가던 한반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에 의한 세력균형에 대한 반대론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토의 연설이 행해지던 시기인 애국계몽기의 한반도에 국제정치 개념으로서의 ‘균세’는 지식으로서 받아들여지기에 시작한다. 먼저 1907년의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의 한 기사를 보자.

權力者는 權利勢力也오 平均者는 平等均勢也라 國爲國이 如人之爲人호야 其大小強弱之勢力이 雖自不同이나 天賦自由之權利則一也라. 勢力이 不得其均則權利亦從而不平 故로 泰西諸國이 特立權力均平之公法호야 母相侵奪호고 各自 保守호니 雖有小國이 間於兩三大國之間而如鼎足相峙호며 輔車相依호야 莫敢先動이라 若使小國으로 被大國攘奪호야 厚培隣疆則自己國勢가 不能無唇亡齒寒之患 故로 必奮起而彈噴호느니 是誠保國之良法也라. 若無此法則大國之於小國에 如強食弱肉호야 可一舉而并吞之언마는 賴有平均之法호야 大小相維에 莫敢違越호느니 萬國公法에 有局外中立者호며 又有攻守同盟者호니 其義亦不外乎平均範圍矣라.⁵⁶⁾

국제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이 논설에서 ‘균세’가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논설의 ‘균세’의 의미는 미묘하다. 저자인 원영의

56) 元泳義 “自助說”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 1907년 7월 25일.

(元泳義)는 국제관계의 원리를 ‘권리세력’ 즉 권력에 의한 것과 ‘평등균세’ 즉 평등으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현실적인 강약의 관계와 관련된 원리로 후자는 천부자유의 권리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분류를 쓴다면 전자가 국제정치의 영역에 후자가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균세’는 여전히 윤리도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설의 마지막 부분에 □□만국공법□□의 논의가 소개되는 것은 원영의의 논의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균세’가 나타나지만 윤리도덕과 관련된 면이 강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정치의 원리로서 ‘균세’를 받아들이는 변화도 보이고 있다. 1908년의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

米 淸同盟演說 米國 흡손 正領이 民主黨 大會委員會에서 演說호야 曰 日本은 野心을 抱호야 種種 諸方面의 陰謀와 密計를 行호즉 米國은 實力表現호을 得하기스가지 淸과 同盟호야 極東의 均勢를 維持호計劃이라더라.⁵⁷⁾

미국과 청의 동맹관계를 설정하여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이 기사는 세력균형의 작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위의 두 논설에서 우리는 애국계몽기의 대한제국에서 국제정치 현실에서의 위상과 새로운 지식 사이에서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자강회월보□□의 기사를 여전히 □□만국공법□□의 주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논의라고, 혹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공정할까? 적어도 당시의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쉽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듯하다. 세력을 평가하면 대한제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한 행위

57) “外國情形” □□대한협회회보□□ 제5호, 1908년 8월 25일, 42-43쪽.

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현실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은 힘의 강약과는 관계없는 작동원리를 가진 영역 밖에 없었다. □□대한협회회보□□의 기사는 ‘균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이 당시의 대한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발견된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황에서 ‘균세’는 한 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더욱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석되어 있었고 다른 한 쪽에서는 현실적인 의미 없는 권력정치의 원리로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반도 내에서 ‘균세’의 이해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국제정치 원리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가 퍼져 나가고 있었다. 1917년 5월 쑨원(孫文, 1866-1925)은 “중국의 존망문제(中國存亡問題)”를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 중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소위 유럽의 강국으로 중국을 침략하고 병합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중국을 침략하고 병합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침략하지 않는 것은 하나는 세력균형의 결과이고 또 하나는 정책의 사정 때문이었다. 세력균형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다.⁵⁸⁾

쑨원이 세력균형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음을 들고 있는 것에서 1910년대 중반기의 중국에서도 정치의 개념으로서의 세력균형이 널리 퍼졌음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쑨원 스스로가 ‘아식민지(亞植民地)’라고 규정한 중국이 여전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쑨원은 중국과 유럽의 국력의 절대적인 차이를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孫文, □□孫文選集 第三卷□□ 東京: 社會思想社(1989年), 199쪽.

유럽제국이 중국을 식민지화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유럽 제국의 세력균형을 들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세력균형 이해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서 이해된 세력균형은 중국도 참여하는 원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국과 같은 국가를 침략의 대상으로 하는 유럽열강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세력균형은 실천하여야 할 무엇이 아니라 관찰하여야 할 무엇으로 머물고 있었고 스스로가 세력균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경우에는 세력균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흐를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

제 5 절 나오며

메이지 일본이 학문의 면에서 독자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나가고, 현실의 면에서 세력균형의 일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균세’에 걸려 있던 □□만국공법□□의 주술이 풀리기 시작했다. 메이지 말엽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지식인들은 세력균형을 국제법의 원리가 아닌 국제정치의 원리로, 그리고 안정의 원리로 새롭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쓰이고 있는 용어인 ‘세력균형’을 확정하였다.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가 기의와 기표에 양 측면 모두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두 가지 면에서 한정적인 것이었다. 첫째, 세력균형의 이해가 곧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국제정치학은 아직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등장하기 않고 있었다. 따라서 세력균형의 발견은 이후의 시기에 국제정치학이 등장할 때에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이 적절하게 분리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를 마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이미 현실 국제정치의 장에서의 세력균형이 장래의 국제법

학과 국제정치학의 분리를 방해하는 쪽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과정에서 세력균형의 원리를 안정의 논리가 아닌 팽창의 정당화 논리로 선전하였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조선과 중국에서 세력균형은 곧 제국의 논리로 비판되고 거부될 조건이 마련되고 있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마틴의 주술에서 벗어났지만 그 자신이 새로운 오해의 여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 볼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학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리의 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제 4 장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의 등장과 ‘세력균형(勢力均衡)’

제 1 절 들어가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세력균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자명성을 파괴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주의(理想主義 idealism)에 기반을 둔 집단안보체제가 나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새로운 국제체제의 제창자가 윌슨(Thomas W. Wilson, 1856-1924)이었고 이 사상의 제도적 표현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었다. 윌슨은 “세력균형은 위대한 게임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신뢰를 상실했다. 그것은 전쟁 이전이나 만연하던 사악한 구시대적 질서이다. 우리의 미래에 세력균형은 없어도 될 것이다”⁵⁹⁾라고 선언하였다. 윌슨에 의하면 세력균형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이었고 세력균형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망선고뿐이었다. 제1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세력균형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얼굴을 한 윤리도덕의 재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전지구차원의 국제질서의 변화는 이미 세계체제에 깊게 편입된 동아시아에도 즉시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국제정치학과 세력균형 1: 반(反)세력 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

당대의 다수의 동아시아인들은 윤리적 질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개조(改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표현하였다.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라 ‘개조’는

59) Ray S. Baker and William E. Dodd(eds.), *The Public Papers of Woodrow Wilson War and Peace*, vol. I, New York: Harper(1927), pp.182-183.

점차 다양한 전개의 양상을 띠게 되지만 초기에 있어서 개조의 국제정치적인 표현은 월슨주의와 공명하는 규범적 국제관계에 대한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한 전형적인 예를 기미독립선언문(己未獨立宣言文)에서 확인해 보자.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의 精神이 巴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蟄한 것이 彼一時의 勢 | 라 하면, 和風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 | 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업으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⁶⁰⁾

사라져 가는 것은 위력의 시대였고 그를 대신하여 오고 있는 것은 도의의 시대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도의의 시대의 도래는 곧 제국주의의 시대의 극복을 의미했고 동시에 위력의 시대의 원리였던 세력균형의 극복을 의미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원리를 앞서서 제창했던 일본에도 있어서도 나타났다.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悅二郎, 1877-1962)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관계의 변화를 권력균형의 국제질서의 전환으로서 다루었다.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함에는 각국의 균형, 권력, 즉 권력의 균형에 의해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 . 이번 전쟁에 의해서 종래의 권력균형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⁶¹⁾

60) 권태익외편 □□자료모음 근대현대한국탐사□□ 서울: 역사비평사(1994년), 147-148쪽.

61) 植原悅二郎, “國際連盟の價値” □□國際連盟□□ 1921年7月號.

우에하라의 논의에서 보이는 세력균형에 대한 회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논자들에 있어서 널리 공유되었던 의견이었다. 하지만, 국제연맹의 이상주의가 실제로 국제관계를 좌우하기 시작한 그 순간 국제연맹의 지도자들은 이미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나 우에하라의 기대를 배반하였고 이 배반에 대하여 일부의 동아시아지식인들은 저항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이들이 중국의 지식인들이었다. 1919년 4월 29일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 연합국이 중국의 산동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중국지식인과 학생의 분노는 5.4운동으로 폭발했다. 5.4운동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던 1919년 5월 18일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로 평가되는 리다자오(李大釗, 1888-1927)는 “비밀외교와 강도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강도정부들이 비밀외교에 기대어 인류가 정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제 맘대로 거래하는 증정품으로 삼고 어떤 강도국가 강도정부에 증여하고 하여 그 강도세력을 확장하는 거점으로 한다면 그것이 산동이건 산북이건 혹은 세계의 어디이건 우리는 전부 승인하지 않고 전부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유럽장물나누기회의(베르사이유 강화회의 - 필자)의 산동에 관한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좁은 애국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침략주의에 반항하고 강도세계의 강도행위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 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들도 한번은 꿈을 그렸다. 인도, 평화가 승리했다, 이 후의 세계는 강도세계를 벗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인간의 세계라는 색채가 더해질 것이다 등등. 그렇지만 이러한 말은 전후 강도세계의 거짓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⁶²⁾

좁은 의미의 비밀외교는 정보의 공개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외교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의 외교를 움직인 더 근본적인 원

62) □□每週評論□□ 第22號, 1919年5月18日.

리는 세력균형이었다. 비밀외교가 강도세계를 만들었으나 그러한 강도세계는 세력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리다자오의 논의에 있어서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명백하게 나타난 비밀외교가 강도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위치 지워지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되었다. 리다자오에 있어서 세력균형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밀외교에 대한 부정과 함께 부정되었던 것이다.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리다자오가 외친 구호는 “강도세계를 개조하라. 비밀외교를 부인하라. 민족자결을 실행하라”였다.⁶³⁾ 결국, 중국민족의 자결을 위해서 세계는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개조해야만 했고 현상유지의 원리인 비밀외교나 세력균형은 사라져야만 했다. 리다자오에 있어서 이 ‘개조’의 논리의 종착역은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리다자오 뿐만이 아니었다.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의 분노는 많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식민주의·반자본주의의 호소를 쉽게 받아들이게끔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균형은 행동으로 변혁시켜야 할 무엇이지 계산하여 유지해야 할 무어는 될 수 없었다.

결국 동아시아 삼국에는 제1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주로 한반도와 일본의 일부-과 그것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다양한 입장-주로 중국의 혁신적 지식인들-이 나타나지만, 본고의 주제인 세력균형에 대해서 보자면 이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력균형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동아시아에도 국제정치학이 배태되고 있었다. 그 주된 무대는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근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한 스스로가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정치에서 행동하고 있던 일본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일본학계에서 국제정치의 문제는 국제법과 외교사의

63) □□每週評論□□ 第22號, 1919年5月18日.

분야에서 보조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정치학은 기본적으로 국가학(國家學 Staatswissenschaft)으로 이해되었고 있었다. 현재의 국제정치학에 해당하는 분야는 국가학의 거대한 체계의 작은 일부로 위치 지워졌고 그 중에서도 외교정책에 관한 내용만이 다루어질 뿐이었다. 국제정치학 관련 학문분과 중 일본에서 가장 먼저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한 외교사 분야도 독립된 학문으로 인지된 것은 국제법학이 확립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19세기말 이후의 일이었고 게다가 제2차 대전 이후에도 몇 개의 대학에 강좌와 과목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정치를 둘러싼 담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우위에 섰던 집단은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외무성의 관료들이었다.⁶⁴⁾ 본고가 지금까지 세력균형 혹은 ‘균세’의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권력정치의 현장에서의 논의에 집중했던 것은 이러한 학문의 부재라는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1차 대전을 분기점으로 변화되어, 대전 이후에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그 계보를 간단히 추적해 보자. 국제정치학의 분립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의 분야도 장악하고 있던 국가학으로부터의 탈피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자이며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였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1878-1933)는 삼일운동의 다음 해인 1920년 □□쥬오코론(中央公論)□□에 발표한 “정치학의 혁신(政治学の革新)”⁶⁵⁾이라는 글에서 “종래의 정치학은 그 (강제조직 - 필자)의 찬미자였다. 적어도 그 대변자였다. 이후의 정치학은 그 감시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권력을 감시하는 정치학은 권력의 밖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시노에 있어서 국가학으로부터의 정치학의 자립은 권력에 기반을 둔

64) 山影進 “日本における國際政治研究の100年” 國際法學會編 □□日本と國際法の100年 第I卷 國際社會と法と政治□□ 東京: 三省堂(2001年), 264쪽.

65) 吉野作造, “政治学の革新” □□中央公論□□ 1920年1月號.

새로운 정치학의 구성이 아니라 국가학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권력의 영역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일탈 위에 정치학을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했다.⁶⁶⁾ 이런 의미에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가 요시노의 민본주의에 관한 일련의 논문에 대해서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몽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⁶⁷⁾

요시노 등의 작업에 의해 정치학이 국가학으로부터 탈피를 시작했을 때 국제정치 영역은 윌슨주의가 유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국제정치학이 국제연맹을 축으로 하는 국제기구론(國際機構論)에서 출발한 것은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⁶⁸⁾

사카이 테쓰야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일본의 국제정치학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시노 사쿠조의 제자였고, 신인회(新人會)의 멤버였이기도 했던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1895-1980)였다. 그는 영국의 다원적국가론의 전개를 시야에 넣고 기능주의적 국제정치론을 전개했다. 1928년에 간행된 □□국제정치와 국제행정(國際政治と國際行政)□□은 그의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의 국제정치관이 세계정부론적인 주권개념비판과는 시종 거리를 두고 있었고, 따라서 법률주의적 국제연맹론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 이외의 정치의 공간에 있어서 그가 주목한 것은 기능(function)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모두 직능 기능 원리가 관철되는 영역으로서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로야마가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법과 정치를 구별시킨 것은 틀림없으나 한편으로 그

66) 瀧井一博 □□ドイツ國家學と明治國制□□ 東京: ミネルヴァ書房(1999年)을 참조.

67) 丸山眞男, □□丸山眞男集 第三卷□□ 東京: 岩波書店(1995年), 136쪽.

68) 이러한 서양의 동향에 영향을 받아 1924년에는 동경대학 법학부에 “국제정치학”을 내용으로 하는 “政治學・政治學史第二講座”가 설립되어, 남바라 시게루(南原繁, 1889-1974)에 의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사상가 강의되기에 이르렀다.

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차이를 희석시켰다. 세계화가 폭주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생소한 ‘국제행정’이라는 용어를 저서의 제목에 쓰고 있는 것에서 이러한 희석화가 명확히 보인다. 이 희석화는 다원주의국가라는 국내정치상을 국제정치에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독자적 원리의 구축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로야마 국제정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세력균형이 그의 국제정치학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국제정치와 국제행정□□에 ‘세력균형’이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제6장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중재재판(第六章 米國を中心とせる國際仲裁裁判)”에서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아래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먼로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세력균형책(勢力均衡策)이므로 그 맹아는 이미 먼로주의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⁶⁹⁾ 하지만 이는 먼로주의라는 특정한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용어로 등장한 것일 뿐이었고 또한 이것이 세력균형의 처음이자 마지막 용례였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국제정치학은 세력균형에 대한 회의가 널리 퍼져 있던 시기에 등장하였고, 따라서 국제정치학은 세력균형 없는, 혹은 세력균형을 철저히 무시한 형태를 취하였다. □□만국공법□□의 일원으로서 동아시아에 화려하게 소개되었던 세력균형은 이 시기에 이르러 국제법학에서는 물론, 새롭게 태어난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도 철저히 외면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의 전간기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에 대한 무시와 반발은 일본의 국제정치학계와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지식계에서 공통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력균형에 대한 부정이

69) 蠟山政道, □□國際政治と國際行政□□ 東京: 岩松堂書店(1928年), 82쪽.

세력균형 개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역설적으로 세력균형 개념은 비난의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개조의 시대에 새로운 국제관계와 대치되는 이전의 낡은 국제관계의 상징으로서 세력균형의 논의가 반복적으로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일본에서 활발했는데 이것이 조선에 수입되거나 수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924년 □□개벽□□의 한 논설은 부정해야 할 대상인 세력균형주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와가티 하여 政治上으로는 立憲主義가 確立하얏고 또 經濟上으로는 産業革命이 완성되얏다. 그 결과로 國家主權의 萬能說은 다시 昔日의 面目이 업쓸 뿐 아니라 도로혀 消極的 不干涉主義를 國家主權의 유일한 標榜으로 하얏다. 그러나 이것은 國內的 事實에 불과하얏다. 한 번 국가와 국가와의 국제적 관계를 哈味할진대 의연히 國家主權의 萬能을 주장하는 것이 罔연한 事實이얏다. 즉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依然한 無政府狀態에 불과하얏다. 다시 말하면 國家以上의 超國家가 업섯고 따라서 國家의 主權를 제한할 何等의 權威가 업섯든 것이 사실이다. 이리하여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赤裸裸한 弱肉強食의 修羅場을 現出한 것이다. 즉 近代國家의 主權은 對內對外에 따라 그 성질이 판이한 양면이 잇섯다. 이것이 近代國家의 矛盾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면 勢力均衡은 결국 如何한 動機와 또 如何한 結果를 致케 될 것인가 하면 國家와 國家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掣肘하기는 불가능하니 다만 세력과 세력과의 균형을 保全하여 서로 先手를 못하게 하는 것 뿐이다.

以上에 말한 勢力均衡主義는 國家主權의 萬能을 否認하자는 것도 아니요 또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主權과 主權과의 對抗關係를 더 一層 大規模的으로 對陣케 하여 그 직접의 衝突을 防止코자 함에 불과하다. 만일 인류의 智見이 超人的 權能에 잇다하면 혹 이러한 세력균형의 보전으로도 일시의 危禍는 免할난지도 알 수 업다.

그러나 超人 아닌 인류의 智見과 또 國家主權의 萬能的 태도가 의연히 跋扈하는 날까지는 國家와 國家와의 충돌이 꺾칠 때가 업쓸 것이다. 즉 충돌의 위험성은 좃금도 減할 것이 업다. 도로혀 勢力均衡主義로 僅僅히 유지하는 평화관계는 其實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假裝의 평화이다. 즉 假裝의 평화는 전쟁의 停止狀態요 전쟁을 근본적으로 업것케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가튼 假裝의 平和下에 아니라 이와가튼 假裝의 평화를 위하여 列國은 依然하게 軍備擴張의 代價를 預備치 안할 수 업섯다. 이것이 소위 평화를 위한 高價의 희생이었다. 어느 학자의 말과 가티 開會中임과 休會中임과을 불문하고 의회는 의회로서의 제도가 존재하며 전쟁이 잇고 업고 間에 制度로서의 전쟁은 항상 존속한다 하얏다. 이것이 곧 列國의 경쟁하는 軍備로써이다. 즉 列國의 軍備는 대내적 보안을 위할 뿐이라고는 너무나 龍大한 것이 事實이다. 그뿐 아니라 對外的 防禦의 口實下에 侵略의 爪牙를 銳養하는 것이 現代國家의 軍備哲學이다. 이리하여 평화를 위한 혹은 正義를 위한 또한 自衛를 위하여 大砲와 軍艦이 縱橫無盡하는 最후의 結論을 짓고 마랏다. 이것이 勢力均衡主義의 前提下에 劃策된 假裝平和의 內面이다.⁷⁰⁾

국내정치와 다른 국제정치의 특징을 무정부상태(anarchy)로 설정하고 이 조건 하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방책으로 국가들의 세력에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세력균형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지금의 시각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세력균형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 위에 저자가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에 대하여 내린 입장은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획책된 가장 평화’라는 것이었다.

폭력의 代身에 國際間的 道德 理性 法律의 지배를 받게하고 국가의 主權萬能에 일정한 한도내의 제한을 置케 하며 또 列國과 列國과의

70) 若嬰生, “勢力均衡主義와 國際協調主義” □□개벽□□ 46호 (1924년), 5-6쪽.

전쟁에 의하여 해결하는 모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講케 하며 이러한 방법에 위반하는 엇더한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는 상당한 制裁를 가하지 아니치 못할 것을 各國의 理想家 學者 政治家들이 차차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均衡主義의 不徹底 不完全한 것을 자각한 남아의 결과이다. 이 의미에 잇서 이와가튼 주장 다시 말하면 勢力均衡主義에 대하여 國際協調主義 又난 國際聯盟主義의 발생은 인류역사 상에 一段의 進歩라 아니할 수 업다.⁷¹⁾

세력균형주의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극복한 새로운 단계가 국제협조주의이며 또한 이에 기반을 둔 국제연맹주의라는 것이다. 개조의 시대의 전형적인 국제정치론인데 이에 대한 설명의 과정에서 세력균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1920년대에는 한반도에서도 세력균형이 퍼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세력균형은 이해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개조의 움직임이 동아시아를 휩쓰는 중에 한편으로 부정되면서 한편으로 저변을 넓혀 가고 있던 세력균형 개념은 이상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한계를 노정함에 따라 다시 한번 전면에서 나타날 기회를 얻는다. 1931년의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전쟁의 시대야말로 권력 정치의 논리가 전면에서 등장하고 그에 따라 세력균형의 논의가 재등장할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선 침략전쟁을 일으킨 세력의 국제정치관을 살펴보자. 만주사변을 주도한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 1889-1949)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 인식 하에 만주 침략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71) 若嬰生(1924년), 7쪽.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증유의 전쟁을 치른 세계는 언젠가 최후의 전쟁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비행기를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섬멸전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배 하에 세계는 절대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최종전이 시작되는 시기는 비행기의 무착륙 세계일주가 가능하게 되는 때인데 이 싸움의 당사자는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동양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이다. 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은 소련을 타도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 만주이다.⁷²⁾

통찰과 독단, 역사적 분석과 주관적 예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의 국제정치관이 가지는 비현실성의 부분은 당시의 일본의 국제정치를 둘러싼 논의가 가지는 비현실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세계 최종전쟁은 현재의 국력과 상관없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명의 대결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정치관의 등장은 세력균형이라는 객관적인 원리가 부정된 결과 국제정치 분야를 상상력이 지배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던 전간기 일본의 국제정치 인식의 구조에 기인한다. 다양한 비현실적인 국제정치 담론들의 횡행했고 미국과 일본의 세계최종전쟁의 시나리오가 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던 한반도와 중국의 세력에 있어서 일본의 전쟁과 관련하여 세력균형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1935년 7월 중국 남경에서 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독립당·의열단의 5당 대표 14명이 모여 결성한 민족혁명당이 기관지 □□민족혁명□□을 창간하면서 서술한 창간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72) 石原莞爾, □□國防論策篇□□ 東京: 原書房(1971年)을 참조.

朝鮮革命에 對한 우리들의 眞摯한 努力과 奮闘는 1935年 7月 我民族革命黨을 結成하게 했다. 大戰以來 帝國主義者間에 保持되고 있던 相互均勢에 依한 一時的 平和機構는 1935年을 最後의 契機로하여 餘地없이 破壞되어 1936年은 均勢破壞에 依한 平和機構의 攪亂에 따라 帝國主義戰爭과 同時에 殖民地 半殖民地 民族의 解放戰爭이 開始되려고 하는 劃期的 歷史의 第1年이다. 이같이 戰爭과 動亂이 날로 더욱더 緊迫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當하여 戰爭의 危機와 싸우면서 革命陣線을 衡進하여 我民族의 自由獨立을 獲取하기 위한 司令部인 本黨은 그 의 귀이며 代言者인 本黨機關紙를 創刊하게 되었다.⁷³⁾

1935년은 일본제국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화북지역(華北地域)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변화되던 시기였다. 이 해 9월에는 중국주둔군 사령관 다다 하야오(多田駿 1882-1948)가 국민정부로부터 독립된 화북정권의 수립을 천명하였고, 11월에는 실제로 일본군의 지도 하에 장성 이남의 비무장지대에 기동방공자치원회(冀東防共自治委員會)가 설립되어 국민정부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0월의 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과 이에 대한 대처에서 국제연맹의 무기력함이 드러난 것과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기구도 결국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력균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앞서 리다자오의 논의에서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지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밀외교가 횡행하는 강도세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연속성의 강조와 일맥상통하는 이해였다. 리다자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세력균형의 원리는 극복되어야 할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이시하라 칸지와 민족혁명당은 서로 대립하는

73) 村田左文, “上海及南京方面ニ於ケル朝鮮人思想狀況” 1936年1月20日(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정치세력이었지만 국제정치 인식에 있어 세력균형을 부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새롭게 등장했던 국제정치학 분야는 국제정치 현실과 담론의 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 하나의 가설로서 1930년대의 혼란으로 인한 이상주의의 몰락이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재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카(Edward H. Carr, 1892-1982)의 □□위기의 20년(*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은 이러한 시대상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었던 것이다.⁷⁴⁾ 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계에서의 반응은 카의 그것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정치학적 결실은 다원적국가론이었고 로야마의 기능주의적 국제정치론은 다원적국가론의 국제정치 영역에의 적용의 결과였다. 하지만 다원적국가론은 국내정치에 있어서 국가와 행정이 사회를 발견하여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행정국가화함에 따라 약체화되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다원주의국가론의 국제정치에서의 발현인 기능주의적 국제정치론은 세력균형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 세력균형이 크게 변동하여 동란의 시대의 재흥하자 권력정치의 이론을 결여했던 다원주의적 국제정치론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실제로 로야마의 국제정치론은 만주사변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서 세계질서 자체의 재편원리로 전환되어 나갔다. 그 결과가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의 논리인데 이 논리에서는 동아시아가 지역적 협동체가 되기 위한 동인을 지역적 운명의 의식, 즉 민족의 존재를 지배하는 운명이 특정지역과 결합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찾고 있다. 근대 국가 자체의 부정으로 이

74) 같은 시기의 미국 국제학계에서의 논쟁의 진행과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의 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Brain C. Schmidt, *The Political Discourse of Anarchy: A Disciplinary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1998), pp. 189-225를 참조.

어지는 궁극적인 제국주의의 논리였던 것이다.⁷⁵⁾ 결국 1930년대 이후 로야마의 국제정치론은 기능주의 국제정치론에서 제국주의의 선전(propaganda)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나갔는데 이러한 약체성은 그의 국제정치론에 권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자유롭게 부유(浮游)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결국,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로 인한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정치학의 대립은 현실이 학문을 압도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국제정치학은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태평양전쟁이 진행 중이던 1944년 1월21일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1887-1957)외상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행하였다.

유럽에 있어서 독일이 대국으로서 그 실력을 신장하는 것은 동양에 있어서 일본이 대국의 실력을 구비하는 것과 함께 영미를 시종 저지라고 하는 바로서 이는 즉 유럽에 있어서 세력균형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중국에 있어서는 문호개방, 기회균등이라는 형태로 반식민지적(半植民地的)정책을 운용하여 온 이유입니다. 몇 개의 세력으로 하여금 서로에게 균형견제토록 하고 그 사이에 전 세계에 있어 사실상의 지배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정책으로서 이것이 소위 과거의 영국류의 평화태세이고 현재 기도되고 있는 미국류의 평화태세입니다.⁷⁶⁾

시게미쓰의 연설은 국회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연사인 시게미쓰, 그리고 그와 호흡을 같이 한 제국 일본의 의원들 사이에

75) 酒井哲哉(1999年), 115-120쪽.

76) “歐洲ニ於テ『ドイツ』ガ大國トシテ其ノ實力ヲ伸長スルコトハ、東洋ニ於テ日本ガ大國ノ實力ヲ具備スルコトト共ニ、米英ノ終始阻止セント欲スル所デアリマシテ、是レ即チ歐洲ニ於テ勢力均衡政策ナルモノヲ實施シ、支那ニ於テハ門戶開放、機會均等主義ノ形ニ於キマシテ、半植民地的政策ヲ運用シテ來タ所以デアリマス、數個ノ勢力ヲシテ相互ニ衝突牽制セシメ、其ノ間ニ全世界ニ互ツテ事實上ノ支配權ヲ設定スルノガ、彼等ノ根本政策デアリマシテ、是ガ所謂過去ニ於ケル英國流ノ平和態勢デアリ、現在企圖サレテ居ル米國流ノ平和態勢ナノデアリマス” 帝國議會 第84回(通常會)重光葵外務大臣の演説, 1944年1月21日.

합의된 세력균형에 대한 이해는 세력균형은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예전의 영국과 당시의 미국이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 사용하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전략의 범위는 오직 유럽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이러한 세력균형을 포함하는 영미의 전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세력을 다투는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세력균형의 원리는 부정되고 있었다.

결국, 카가 말한 규범적 국제정치론의 발흥에 따른 위기의 20년은 동아시아에서도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양과 동아시아의 위기 경험에는 전제의 차이가 존재했다.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의 유럽협조체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세력균형체제의 안정적인 작동에 의한 안정의 역사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었다. 제국주의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도 그에 대항하여 싸웠던 한반도와 중국의 세력에 있어서 이 점은 공통되었다. 제국주의를 둘러싸고 양극에 위치하여 대립하고 있던 이들은 안정의 논리로서의 세력균형체제의 작동을 구상하지 못한 채 선불리 세력균형에 대한 극복의 논리를 주창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동아시아인이었던 것이다.

제 3 절 국제정치학과 세력균형 2: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패망 이후 동아시아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제에서 탈피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두 영역의 분립은 즉, 제국들 간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질서와 식민지를 둘러싼 우승열패의 무질서의 분립은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전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각국 스스로가 참여하여 세력균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발행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세력균형의 논의가 나타나는 것도 그리 놀라운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政治經濟의 노력균형을 유지코자 열국은 武裝平和를 강조하는 금일에 있어서 朝鮮民族은 감정과 희망만으로써 外國依存主義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끝까지 자국의 발전과 민족의 영예를 위한다는 國際的 조류를 충분히 파악하여 우리의 백년의 대계에 과오가 없도록 냉철한 國際眼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심하여야 할 것은 사상적 勢力均衡이 아니라 政治 經濟支配의 勢力均衡인 것이며 우리는 자육적의욕과 역사에 準則한 세계관을 확립하여 國際平和建設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⁷⁷⁾

세력균형의 실현의 역사를 못 가졌지만 그에 대한 지식은 꾸준히 습득해 왔던 한반도에서 스스로가 참여하는 세력균형체제의 상이 그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지 머리 속에 그리는 사상적 세력균형이 아니라 실제의 현실에서 움직이는 정치경제의 세력균형으로 구상되었다.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는 선각자의 인식이 한반도에 있어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 서양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국제협조체제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무너진 것이 명백해지자 버려졌던 세력균형이 부활하였다. 19세기의 안정의 경험이 널리 공유된 서양에서 세력균형의 질서에의 회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회귀의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의 원리는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정치가·외교관의 기술의 범주를 뛰어넘기에 이르렀다. 새롭

77) “사설 국제정세와 조선의 입장” □□東亞日報□□ 1946年3月18日.

게 등장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분야에 있어서 세력균형은 핵심적 이론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냉전의 시기에 세력균형은 지속적으로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의 핵심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국제정치학으로의 경사라는 변화가 서양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동아시아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세력균형의 원리가 널리 공유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 둘째, 제1차 대전 이후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만들어냈던 국제정치학의 존재가 급격한 변화를 막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동아시아 전체에 공유된 특징이었고 후자는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현상이었다.

후자의 전개를 잠시 살펴보자. 일본에서 국제관계론이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쿄대 교양학부교양학과에 국제관계론분과가 설치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설치와 함께 그 기본과목으로 ‘국제정치경제론’이 개설되어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 1893-1961)가 담당하였다. 야나이하라로부터 이 과목을 이어받은 이가 가와다 타다시(川田侃, 1925-)였다. 가와다는 1958년에 본격적인 국제관계론 교과서 □□국제관계개론(國際關係概論)□□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이후 수십 년간 일본 국제정치학의 교과서로 군림하게 된다. 출판의 준비과정에서 야나이하라 타다오는 가와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고 한다.

대저 국제관계론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두 자네의 책에 들어가 있도록 신경을 쓰고 특히 국제정치론과 국제법에 자네가 약하다고 생각되니까 주의하게.⁷⁸⁾

야나이하라는 국제관계론에 포함되거나 최소한 고려되어야 할 학문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국제정치론과 함께 국제법이 포함

78) 川田侃, “私と國際關係論” □□國際關係論研究□□ 東京: 東京書籍(1996年), 335쪽.

되어 있다. 실제 가와다는 □□국제관계개론□□에서 당시의 미국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국제관계론의 연구내용은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기구론(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정치론(International Politics)의 세 분야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다.⁷⁹⁾ 이러한 이해는 당시의 미국학계의 동향에 대한 소개로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미국과 일본의 국제정치학의 성장의 과정을 고려하면 두 학계의 차이를 심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겐소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바이마르 시기 이후 독일 국법학계에서 행해진 켈젠(Hans Kelsen, 1881-1973)의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국제관계 영역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⁸⁰⁾ 그리고 그의 국제정치론에서 세력균형이야말로 국제법에서 국제정치가, 그리고 국제법학에서 국제정치학이 독립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저서는 국제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정치학-Politics among Nations-을 제목에 붙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국제정치학의 국제법학으로부터의 완전한 절연의 과정이 결여된 채로 국제정치학과 국제법학이 포함된 국제관계론이 수입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야나이하라가 도쿄대학의 식민지 연구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전전부터 국제정치학의 형성에 관여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위의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전전의 국제정치학의 흐름이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의 독립을 저해하는 양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1947년 발표한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79) 川田侃, □□國際關係論概論□□東京: 東京大学出版会(1958年), 10-11쪽.

80) 모겐소 국제정치학형성에 있어서의 켈젠의 위치에 에 대해서는 長尾竜一『國際法から國際政治へ—H. J. モーゲンソウのドイツ的背景』□□日本法学□□第67卷3号, (2001年), 28-32쪽을 참조.

우리나라의 정치학은 극언하면 부활해야 할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 . 물론 이러한 우리나라 정치학의 불임성은 단순히 그 책임을 정치학자의 태만과 무능에 돌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메이지 이후의 정치구조에 규정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⁸¹⁾

마루야마의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내정치를 둘러싼 논의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는 서양과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옳을 듯하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로야마의 아시아론은 전후에도 이어져, 개발도상국의 신흥 민족주의와 기능적 통합론의 조화에 관한 논의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1920년대부터의 관심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⁸²⁾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 로야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에 약소국이 참가하여 국제정치가 기능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정치가 상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리고 있다. 권력과 상관없이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능주의의 테제에 대한 집착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로야마의 국제정치학은 권력의 대척에서 권력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국제정치를 상정했고 그 과정에서 전전은 물론 전후 초기에 있어서도 일본의 국제정치학이 세력균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저해해 온 것이다.

제 4 절 나오며

동아시아에서도 제1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학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법·국제법학에 대응되는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의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차 대전 이후의 ‘개조’의 시대에서 세력균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는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부정되고 있

81) 丸山眞男(1995年), 135・137쪽.

82) 酒井哲哉(1999年), 121쪽.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일본에서 나타난 국제정치학도 세력균형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세력균형의 부정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자 이 객관적인 원리를 결여한 기능주의적 국제정치학은 이론적 취약성으로 인해 제국주의 팽창의 정당화 논리로 타락해갔다. 한편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국제정치적 위치에서 ‘개조’의 시기를 맞이한 조선과 중국에서 세력균형은 일본 등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의 논리로 파악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해는 전쟁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1864년 마틴이 세력균형을 동아시아에 소개한 후 80여년이 흐른 1945년에도 동아시아에는 세력균형에 의해 운용되는 안정적 국제질서도, 그리고 세력균형의 원리에 의한 국제정치학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서 국제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의 분리는 결국 1945년 이후 수입품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근대 국제정치의 핵심 원리인 세력균형은 동아시아에 국제법 원리로서 소개되었다. 이후 세력균형을 국제정치의 원리로 이해하고 국제법·국제법학의 영역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의 영역을 올바르게 분립시키는 작업에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러한 오랜 오해와 그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실천의 역사는 현재의 동아시아인이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과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이 국제법·국제법학의 틀을 벗어나 국제정치·국제정치학의 원리로 인정된 역사가 일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이 지역에서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 세력균형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여 안정을 달성한 경험이 일천함을 의미한다.

긴 시간 축에서 이 일천함을 일별해 보자. 서양이 근대 국제관계 내부에서 질서의 원리를 찾는 것에 실패하여 전쟁의 참화에서 허덕이던 17중반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동아시아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평화는 긴밀한 국제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소멸 - 즉, 해금(海禁)을 통한 상호관계의 최소화 - 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서양이 권력정치에 기반을 둔 안정의 원리인 세력균형을 실현함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의 충격 이후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전쟁 - 대만출병,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 의 시기에 빠져들었다.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권력은 어디까지나 갈등의 원리로 기능하여 그 속에서 안정의 원리를 찾아내는 작업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의 시작과 함께 이 지역에도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 지역의 행위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세력균형이 이 지역에도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지역의 행위자들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세력균형의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이 수입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현상도 일부국가에 한정되었고 또한 이들 국가에 있어서도 주류의 담론으로 군림한 역사는 일천하다.

이러한 국제법·국제법학 영역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 영역의 분리의 일천함, 그리고 세력균형의 운용의 일천함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국제법학 영역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 영역의 재결합을 논함에 있어서 서양과는 다른 의미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즉 이 지역의 세력균형의 불안정은 세력의 급속한 변동-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두-이라는 보편적인 원인과 함께 이 지역의 행위자들이 세력균형의 운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증대되고 있다. 국제법·국제법학 영역과 국제정치·국제정치학 영역이 겹치는 복잡한 영역을 구성하는 것은-특히 인권이나 환경 분야 등의 새로운 의제에 있어서-전 인류의 차원에서 급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각 영역에 있어서의 안정된 운용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똑같은 속도와 깊이로 진행해야 하는가, 혹은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력균형의 개념사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동아시아에서의 두 영역의 복합화는 서양의 그것보다 몇 걸음 뒤쳐진 것, 무척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1. 한글·국한문혼용

권태익외편, □□자료모음 근대현대한국탐사□□ 서울: 역사비평사(1994년).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동양 禮와 서양 公法□□ 서울: 나남출판, (1997년).

“사설 국제정세와 조선의 입장” □□東亞日報□□ 1946年3月18日.

송병기편역, □□개방과 예측: 대미수교관련 수신사기록(초)□□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2000년).

若嬰生, “勢力均衡主義와 國際協調主義” □□개벽□□ 46호(1924년).

“外國情形” □□대한협회회보□□ 제5호, 1908년8월25일.

元泳義, “自助說”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 1907년7월25일.

이근관, “동아시아에서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고찰 - □□만국공법□□의 번역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9권2호(2002년).

장인성, “근대 한국의 세력균형 개념 - ‘균세’와 ‘정립’ -” □□세계정치□□ 25집2호(2004년).

2. 중국어·고전중국어 (한어병음순).

惠頓, □□萬國公法□□上海: 上海書店出版者(2002년)[원저는 1864년].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中華書局(1936년).

□□每週評論□□ 第22號, 1919年5月18日.

참고문헌

- 錢種書主編, □□郭嵩燾等使西記六種□□ 北京: 三聯書店(1998年).
- 孫 文, □□孫文選集 第三卷□□ 東京: 社會思想社(1989年).
- 田 濤, □□國際法輸入與晚清中國□□ 濟南: 濟南出版社, (2001년).
- 鄭觀應, □□盛世危言□□ 鄭州: 中州古籍出版社(1998年)[원저는 1894년].

3. 일본어 (50음순)

- 明石欽司, “日本の国際法学『対外発信』の100年: 欧文著作公刊活動を題材に” 國際法學會編 □□日本と國際法の100年 第 I 卷 國際社會と法と政治□□ 東京: 三省堂(2001年).
- Alessandro Paternostro述・本野一郎譯, □□國際公法講義□□ 東京: 和佛法律學校(1894年).
- 石原莞爾, □□國防論策篇□□ 東京: 原書房(1971年).
- 植原悅二郎, “國際連盟の價值” □□國際連盟□□ 1921年7月號.
- 尾佐竹猛, □□近世日本の国際観念の發達□□東京: 共立社(1937年).
- 川田侃, □□國際關係論概論□□東京: 東京大学出版会(1958年).
- 川田侃, “私と國際關係論” □□國際關係論研究□□ 東京: 東京書籍(1996年).
- 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第四卷□□ 東京: 嚴南堂書店(1967年).
- 酒井哲哉, “『東亞協同體論』から『近代化論』へ” □□年報政治學1998□□ 東京: 岩波書店(1999年).
- 酒井哲哉, “□□國際關係論□□ の成立—近代日本の立場から考える” □□倉文□□ 431號(2001年).
- 酒井哲哉, “國際關係論の成立と國際法學—日本近代史研究からの一考察—” □□世界法年報□□ 22號(2003年).

- 佐々木揚, □□清末中國における日本觀と西洋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0年).
- 柴原龜二, □□講和條約ノ價值□□ 大阪: 柴原龜二(1905年).
- 芝原拓自等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東京: 岩波書店(1988年).
- 瀧井一博, □□ドイツ國家學と明治國制□□ 東京: ミネルヴァ書房(1999年).
- Theodore D. Woolsey著・箕作麟祥譯, □□國際法□□ 東京: 弘文堂(1875年).
- 『特集 萬國公法の受容と適用』 □□東アジア近代史□□ 二號(1999年).
- 『特集 アジアにおける近代國際法』 □□東アジア近代史□□ 三號(2000年).
- 長尾竜一『國際法から國際政治へ—H. J. モーゲンソーのドイツ的背景』□□ 日本法学□□第67卷3号、(2001年).
- “釜山守谷ニ開催ノ歡迎會席上伊藤統監演說要領” 1909년1월8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穂積陳重, □□法窓夜話□□ 東京:岩波書店(1986年)[원저는 1915년].
- 丸山眞男, □□丸山眞男集 第三卷□□ 東京: 岩波書店(1995年).
- 村田左文, “上海及南京方面ニ於ケル朝鮮人思想狀況” 1936年1月20日(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森征一, “お雇いイタリア人アレッサンドロ・パテルノストロの生涯(Appunti Sulla Vita di Alessandro Paternostro, Giureconsulto Italiano Dell'impero Giapponesse)” *Keio law review*(1975年).
- 山影進, “日本における國際政治研究の100年” 國際法學會編 □□日本と國際法の100年 第I卷 國際社會と法と政治□□ 東京: 三省堂(2001年).
-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東京: 岩波書店 (2001年)

참 고 문 헌

吉野作造, “國家生活の一新” □□中央公論□□ 1920年1月號.

蠟山政道, □□國際政治と國際行政□□ 東京: 岩松堂書店(1928年).

4. 영어 (알파벳순)

Baker, Ray S. and Dodd, William E. (eds.), *The Public Papers of Woodrow Wilson War and Peace*, vol. I, New York: Harper(1927).

Cobden, Richard, *The Political Writings of Richard Cobden*, London: T. Fishier Unwon, 1903, reprinted, New York: Kraus Repring(1969).

Covell, Ralph R., “The Life and Thought of W. A. P. Martin: Agent and Interpreter of Sino-American Contact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Unpublished Ph. D. Paper, University of Denver(1975)

Gross, Leo,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in R. A. Falk and W. F. Hanrieder eds.,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An Introductory Reader*(Philadelphia, 1969).

Gulick, Edward V.,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 A Case Histor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One of the Great Concepts of European Statecraft*(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55).

Haas, Ernst B., “The Balance of Power: Prescription, Concept, or Propaganda,” *World Politics* vol. 5, no.4(July 1953).

Hinsley, Francis H.,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tates*(Cambridge Univ. Press, 1964).

Howland, Douglas R., *Translating the West: Language and Political Reason in Nineteenth Century Japan*,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4 no.3(2000 Summer) ‘Legalization and World Politics’.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1966).
-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MA: Beacon Press(1957)[박현수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민음사, (1991년)].
- Schmidt, Brain C., *The Political Discourse of Anarchy: A Disciplinary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1998).
- Wheaton, Henry,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ondon/Boston: Sampson Low Son & co./Little Brown Company(1857).